
완전히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
도정 4개년 계획

2018. 08.

새로운 경남위원회

1부. 도정 4개년 계획이 나오기까지

- 1. 도정 4개년 계획의 의의 1
- 2. 도정 4개년 계획 수립의 경과 3
- 3. 도정 4개년 계획의 범위와 수립체계 5

2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과제

- 1. 대내외 환경과 과제 11
- 2. 도정 4개년계획의 체제 15
- 3. 다시 뛰는 경남 경제 19
- 4. 사람 중심 경남 복지 38
- 5. 함께 여는 혁신 도정 57

3부. 6대 중점과제

- 1. 경제혁신 자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71
- 2.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 74
- 3. 서부경남 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79
- 4. R&D 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83
- 5.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87
- 6. 저출생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91

4부. 도정 4개년 계획의 과제추진 및 점검방안

- 1. 사업 추진체계와 역할분담 97
- 2. 투자계획 104
- 3. 조직수요 및 조례 112

부 록 115

제1부

도정 4개년 계획이 나오기까지

- 1 도정 4개년 계획의 의의
- 2 도정 4개년 계획 수립의 경과
- 3 도정 4개년 계획의 범위와 수립체계

제1부 도정 4개년 계획이 나오기까지

1 도정 4개년 계획의 의의

도정운영의 설계도

- 그동안 경제적 기반과 활동이 건실하였던 경남의 경제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위축되고 도민들의 삶이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요구됨
- 이러한 상황에서 6.13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김경수 도정은 도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도정 4개년 계획은 도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불어넣고 도정운영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할 것임
- 설계도 구실을 하는 도정 4개년 계획을 통해 도민을 비롯한 도지사와 도청공직자, 도의회 의원들은 도정운영의 전체적인 모습 파악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향후 4년간 도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임

도정운영의 길잡이

- 도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도정이 일정한 방향과 목적, 그리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사전계획을 토대로 운영하게 되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도정 4개년 계획은 도지사의 도정철학과 비전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제시하였던 공약을 토대로 수립한 것으로, 향후 4년간 도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임. 아울러 도민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임
- 특히 행정의 일선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도정 4개년 계획은 활동의 중요한 지침이 됨. 즉 향후 4년 동안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달성하는데 공직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도정운영의 평가기준

- 도정 4개년 계획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공약을 부문별 도정활동의 과제로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도정 4개년 계획에 제시된 부문별 과제의 내용과 목표는 실제 활동의 결과와 비교되어 그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임
- 부문별 도정활동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면 도정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도정 4개년 계획에 부문별로 제시된 각종 과제들은 도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임
- 도정 4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부문별 과제에 대한 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도정운영의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과정에 일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모색 등이 필요함

2 도정 4개년 계획 수립의 경과

■ 계획수립의 준비

- 2018년 6월 13일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경수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새로운 경남’을 비전으로 삼아 제시한 각종 공약을 바탕으로, 향후 4년 동안 도정운영을 위한 지침적 성격의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착수함
- 이의 일환으로 2018년 6월 21일, 도정인수 작업과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경남위원회’를 발족시킴.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기획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사회분과, 행정혁신분과 등 5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출범함
- 본격적인 계획수립에 앞서 위원장은 기획분과 회의를 소집하여 기획분과위원들과 함께 향후 계획수립의 일정과 방향에 대한 예비적인 논의를 수행함. 향후 일정과 계획수립방법에 대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분과장회의를 개최하여 계획수립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함

■ 계획수립의 추진

-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6월 22일부터 2주간 분과별로 소관 실국의 책임자(실국장)와 중간관리자(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아울러 관련 공약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전개함. 위원장은 분과의 활동을 총괄함과 함께 신임 도지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도지사의 방침과 관심사가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함
-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7월 2일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모든 위원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의 구성체계와 내용의 윤곽에 대해 논의함. 이 날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4개년 계획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7월 10일에는 신임 도지사의 참석하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함
- 7월 10일 신임도지사,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새로운 경남위원회의’의 각 분과별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인력(각 분과별로 1명의 사무관급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4개년 계획수립의 완성을 위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됨. 특히 신임도지사는 임기 4년동안 도정수행의 안내서가 될 4개년 계획의 수립체계와 내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도정운영 방향, 과제와 중점과제의 설정방향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4개년 계획에 반영되기를 요청함
- 7월 10일 이후 각 분과는 29회 분과회의, 38회 토론회, 15회 간담회 등 실무진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중간보고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보완하였음. 또한 분과장 회의를 14회 개최하여 전체적인 체계속에서 분과별 논의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함

■ 계획수립의 완료

- 중간보고이후 15일 동안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작성한 최종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7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인수위 자문위원, 전문위원, 도청의 실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계획서를 마무리 짓기 위한 보고회 겸 종합토론회를 개최함
- 7월 26일과 27일의 종합토론회 논의결과를 보완한 도정 4개년 계획의 내용을 8월 1일 김경수 도지사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향후 4년동안 경남의 도정운영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도정 4개년 계획의 수립을 완료함

3 도정 4개년 계획의 범위와 수립체계

도정 4개년 계획의 범위

- 도정 4개년 계획은 제7대 동시지방선거(2018.6.13.)의 결과로 도정의 책임을 맡아 취임한 김경수 도지사가 향후 4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과제들의 목표와 추진방법, 추진상의 쟁점요소, 연차별 소요재원 및 추진일정, 그리고 기대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내외적으로 제시하는 것임
- 도정 4개년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과제’의 원천(sources)은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식별된 114개의 공약과 지자체간의 협약(4건), 실국별 현안업무보고 내용가운데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현안사업, 도민참여의 통로로 개설한 경남1번가를 통해 제안된 일부의 정책제안 들임.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성을 가진 것은 공식적으로 식별된 114개의 공약임

도정 4개년 계획의 수립체계

- 도정 4개년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46개의 정책과제는 <비전-운영원리(도정방침)-목표-전략-과제>라는 체계로 설정하여 기술함. 비전은 침체된 경남의 경제와 위축된 도민의 삶을 도민과 함께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경남’을 건설한다는 기치아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으로 설정함
-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도정운영의 원리(도정방침)는 ‘소통과 참여’, ‘공정과 포용’, ‘실용과 혁신’의 3가지로 설정함. ‘소통과 참여’는 김경수 도지사가 선거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원리(방침)로 향후 도정운영에 있어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방적 논의구조 속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함. 즉, 참여와 소통은 도정운영의 플랫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공정과 포용’은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형성된 플랫폼의 행위자들이 어떠한 행동양식으로 논의하고 소통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임. 공정을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상대방을 포용하는 자세로 참여하고 의사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부의 쏠림과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행위자들이 공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문제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한편 ‘실용과 혁신’은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에서 행위자들이 공정과 포용의 자세로 상호작용을 해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아가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냄

-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비전과 ‘소통과 참여’, ‘공정과 포용’, ‘실용과 혁신’의 3가지 도정운영의 기본원리(도정방침)하에 추구하고자 하는 도정의 3대 목표는 경제의 혁신적 재건, 도민의 행복증진, 도정운영의 혁신으로 각 각 ‘다시 뛰는 경남경제’, ‘사람중심 경남복지’, ‘함께 여는 혁신도정’으로 설정하였음. 경제재건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 ‘다시 뛰는 경남경제’로 설정한 것은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을 성장동력의 기반으로 삼아 부흥해 온 경남이 근래 들어 제조업의 쇠퇴와 일자리 창출능력 상실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경제의 혁신적 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도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활동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정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3대 목표의 요체임
- 앞에서 언급한 3대 목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 목표별로 전략들을 제시하였음. ‘다시 뛰는 경남경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된 전략은 4가지(경남 신경제 지도의 체계적 이행,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임. 다음으로 ‘사람 중심 경남복지’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은 5가지(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혁신,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로 제시함. 끝으로 ‘함께 여는 혁신도정’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3가지(참여 민주주의 확대로 만드는 사회혁신,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를 제시함
- 3대 목표와 12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114개의 공약과 현안사업, 지자체간의 협약내용을 토대로 46개 과제를 도출하였음. ‘다시 뛰는 경남경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도출한 과제는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을 비롯한 18개로 구성되어 있음. 다음으로 ‘사람중심 경남복지’의 목표달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18개의 과제를, 그리고 ‘함께 여는 혁신도정’의 경우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을 포함한 10개의 과제를 도출하였음. 이들 총 46개 과제는 각 과제별로 과제목표, 주요내용, 쟁점사항(장애요인), 조치사항 및 재원계획, 기대효과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음

■ 과제의 도출 및 중점과제의 선정과정

- 도정 4개년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6개 과제임. 도출된 46개의 과제는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114의 공약과, 실국별 업무가운데 정책의 연속성 차원

에서 중시되어야 할 일부 현안사업,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담겨있는 주요 사업,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행정혁신과제 등을 토대로 도출하였음. 이 가운데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114개의 공약으로, 이들 공약들은 공약의 중요도, 수준, 구체성 등의 측면에서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어 114개의 공약을 중요도, 수준,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50여개의 과제로 범주화(묶는)하는 작업을 먼저 실시함

- 공약을 범주화해서 과제로 도출하고, 현안사업, 자치단체와의 협약내용 등을 토대로 과제를 추가하고 과제의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은 1차로 각 분과에서 이루어졌음. ‘다시 뛰는 경남경제’의 목표와 관련된 과제는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에서, ‘사람중심 경남복지’의 목표와 관련된 과제의 경우는 사회분과에서, 그리고 ‘함께 여는 혁신도정’의 목표와 관련된 과제의 도출은 행정혁신분과에서 수행함. 각 분과에서 공약 등을 토대로 범주화하여 도출한 과제는 분과장 회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침. 이러한 과정을 3-4차례 정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46개의 과제가 확정됨
- 도정 4개년 계획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46개의 과제를 토대로 중점과제 6개를 선정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임. 중점과제는 다른 과제의 수행에 토대가 된다든지, 새로운 경남으로 변화하는데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선도적인 구실을 한다든지, 도민들의 일상적 삶에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여, 도지사가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의미함. 중점과제의 선정은 먼저 분과장 회의를 통해 3대 목표별 중점과제 선정의 비중을 조정하고, 이어 해당 분과에서 소관 과제 가운데 앞에서 열거한 기준과 비중에 따라 선정한 다음, 다시 분과장 회의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짐. 이러한 과정도 3-4차례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6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채택함

제2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과제

- 1 대내외 환경과 과제
- 2 도정 4개년계획의 체제
- 3 다시 뛰는 경남 경제
- 4 사람 중심 경남 복지
- 5 함께 여는 혁신 도정

제2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과제

1 대내외 환경과 과제

■ 촛불 혁명과 국정 정상화에 대한 열망

-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 이어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이전 정부의 집권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면서 747공약, 4대강 공약 등 경제와 국토개발에 치중한 국정을 운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집권기간 경제적 업적은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음(매일경제신문 2012.5.1.)
- 이명박정부에 이어 2012년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야와 퇴진의 압력을 받아옴. 하야와 퇴진의 압력은 누적 연인원 1500만명이 참여한 촛불집회로 정점에 달함. 세월호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 국정농단에 의한 국정운영의 파행으로 야기된 촛불집회는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일반국민들의 요구가 표출된 것임
- 촛불집회는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비폭력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점에서 새로운 시민운동이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되기도 함
- 촛불혁명으로 나타난 공동체 구성원들의 열망은 거대한 담론이나 급격한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상이 정상화되는 것에 있음. 세월호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를, 국정농단에서 들어난 것처럼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불편부당한 이익이 추구되는 사회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속에서 성실히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

■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

- 촛불혁명을 배경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에 직면함. 대내적으로는 국정농단의 폐해를 수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공동체의 틀을 확립하고, 엄중한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와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안게 됨. 대외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집권 10년 동안 지속된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미동맹과 대 중국외교의 불안

정 등을 극복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해야 할 과제에 직면함

- 전임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함.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함. 국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기조로,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함
-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설정한 5대 목표 즉,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국정농단과 적폐로 얼룩진 국가공동체를 제자리에 세우고 시대정신을 구현해 가기 위한 기틀로 볼 수 있을 것임

■ 지난 도정에 대한 평가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래, 경상남도는 그동안 4명의 민선 도지사가 도정을 맡아온 바 있음. 그러나 그 가운데 3명이 중도 사퇴하여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3개월 도지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도정이 이루어지는 파행을 겪어옴. 특히 2012년 12월의 보궐선거와 2014년 6월의 제6대 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되어 4년 4개월간의 도정을 운영하다가 중도 사퇴한 홍준표 전 도지사는 소통을 등한시한 일방적인 도정운영과 장기간의 권한대행체제 사태를 야기한 행위로 비난을 면치 못하였음
- 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숙의를 소홀히 하고 공약에 없는 중요한 사안을 결행하여 도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은 향후 도정의 운영에 성찰의 사례로 삼아야 할 것임.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숙의를 소홀히 하여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 대표적인 사례는 무상급식의 폐지를 들 수 있음. 그리고 공약에서 제시하지 않은 중요 사안을 결행하여 도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사례로는 진주의료원 폐쇄를 들 수 있음
- 도지사 재임기간의 주요 치적으로 홍보하여 왔던 채무제로도 도정의 운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채무제로라는 소극적인 재정운영으로 인해 경상남도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미래 먹거리 50년 정책을 내세웠으면서도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미래지향적 재정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경상남도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임
- 지역의 언론매체에서 제기되어 온 전임 도지사 재임기간동안의 경상남도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은 장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심각한 불신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김경수 도정의 과제

- 도정의 집행자인 공무원들과 도정의 대상이 되었던 도민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였던 지난 도정의 파행과 1년 3개월 동안의 도지사 공백 기간의 파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정의 운영방식과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됨
- 독선과 오만, 일방통행으로 각인된 전임 도지사의 도정 운영방식을 일신하기 위해서는 겸손, 열정, 헌신의 자세로 공무원들과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함. 또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적극화 하고, 공감과 경청의 숙의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당면한 문제해결과 미래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임
- 구체적인 현안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남이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임. 그동안 기계산업, 조선산업의 쇠퇴와 여타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 토대와 도민들의 민생경제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경남이 당면한 경제적 여건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제조업이 당면하고 있는 요소생산성 향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ICT를 결합한 제조업으로의 전환, 즉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의 실현이 필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새로운 경제의 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교육기회의 제공임. 또한 공동체의 약화로 인해 야기된 불안, 불만, 불신으로부터 보다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의 확충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정의 역할이 필요함. 이러한 도정의 역할이 충실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함. 신임 도지사는 도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도정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정의 혁신과 도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분야의 정책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이루어내야 할 것임

■ 새로운 경남

- 경남은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하여 도민들의 삶이 위축되고 있음. 위축된 도민들의 삶에 변화와 희망을 주기 위해 경남이 나가야 할 지향점은 현재의 상태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경남임. 현재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상태의 경남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경제체질의 개선과 변화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 공동체 운영방식 등 보다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변화임
- 경남경제의 토대인 제조업의 성장동력 약화와 일자리 창출력의 약화로 위축된 경제와 민

생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경남에 산재한 제조업의 현장에서 ICT가 결합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가 실현되어야 함. 기존의 제조업 틀에 ICT가 결합하여 스마트화한 제조업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모습이 나타날 것임. ICT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적 토대의 구축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에도 적용되어야 함.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경제활동 전반의 토대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나가야 할 것임. 이와 함께 KTX와 같이 지역별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획기적 인프라의 구축도 또한 변화된 경남의 새로운 모습일 것임

- 도민들의 삶의 질은 경제적인 재도약을 통한 물질적 만족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일체감, 위험의 공유와 분담을 통한 안정감, 신체와 정신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적 쾌적함 등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 이외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의 제공이 요구됨. 나아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행복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간에 서로 나누고(공유경제) 배려(사회적 가치)하는 분위기가 넘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임. 또한 문화체육시설과 같은 지역의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참여와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의 구축과 실행이 요청됨
- 앞에서 언급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동체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도정의 운영철학과 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 오만과 독선과 불통의 도정이 아닌, 공감과 겸손과 소통의 도정으로 변화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도민들이 도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공직자와의 접촉경험이 만족스럽고, 언제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도정 4개년 계획의 체제

비 전

완전히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

운영원리

소통과 참여 | 공정과 포용 | 실용과 혁신

3대 목표 및 12개 전략

다시 뛰는
경남 경제

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
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18개 과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4.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
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18개 과제

함께 여는
혁신 도정

1. 참여 민주주의 확대로 만드는 사회혁신
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

10개 과제

중점
과제

- ① 경제혁신 자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 ②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 ③ 서부경남 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 ④ R&D 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 ⑤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 ⑥ 저출생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목표1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전략

도정과제(전담부서)

전략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 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국가산단추진단)
- 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사업 확충 (국가산단추진단)
- 3 R&D 체계 혁신과 광역연구플랫폼 구축 (연구개발지원과)
- 4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항만정책과)
- 5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서부대개발과)
- 6 서부경남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미래융복합산업과)

전략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

- 7 청년일자리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일자리창출과)
- 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창출과)
- 9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전략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 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경제정책과)
- 11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 (경제정책과)
- 12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기업지원과)
- 13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과)

전략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 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농산물유통과)
- 15 농산물 수급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친환경농업과)
- 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농업정책과)
- 17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협치 농정 실현 (농업정책과)
- 18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 (어업진흥과)

목표2

사람 중심 경남 복지

전략

도정과제(전담부서)

전략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 19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지원담당관)
- 20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 (교육지원담당관)
- 21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여성가족정책관)
- 22 지역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증진 (보건행정과)

전략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 23 노동자 권익 보호 (기업지원과)
- 24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여성가족정책관)
- 2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복지과)
- 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전략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 27 최적의 대기질 관리 (기후대기과)
- 28 낙동강 수질개선 (수질관리과)
- 29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연구개발지원과)

전략4.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

- 30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문화예술과)
- 31 생활 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확충 (체육지원과)
- 32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 (관광진흥과)

전략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 33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도시계획과)
- 34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 (문화예술과)
- 35 수요자 중심 광역교통체계 확충 (교통물류과)
- 36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안전정책과)

목표3

함께 여는 혁신 도정

전략	도정과제(전담부서)
전략1.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만드는 사회혁신	
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행정과)
38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 (행정과)
39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 (공보관)
전략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40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정책기획관)
41	통합행정체계 구축 (교육지원담당관)
42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정책기획관)
전략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	
43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행정과)
44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법무담당관)
45	적소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인사과)
46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행정과)

3 목표1 : 다시 뛰는 경남 경제

-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경남은 제조업의 메카로 견실한 경제적 입지를 다져왔음
- 하지만 기계산업, 조선산업 등 과거 성장동력의 주축이던 주요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한 경남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음
-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런 경제 위기에 따라 일자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경남이 당면한 경제적 여건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경제 전반의 토대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도 그중의 하나임

전 략

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

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전략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과제 1

경제혁신 자원 1조원 조성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공약 1, 2, 110, 111
국가산단추진단, 예산담당관, 일자리창출과

과제목표

- 경제위기 타개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자원 1조원 조성
- 경남경제회생을 위해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 구성
- 일자리컨트롤타워 설치, 지역의 고용실천전략 수립

주요내용

- **경제혁신자원 확보** 혁신성장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 등 1조원 확보
-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제안·조정
 - 신경제지도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컨트롤타워, 경제정책 자문
 - 실행기구로서 경제혁신추진단 설치, 경제혁신 마스트플랜 수립·시행·사후점검
- **행정조직 개편** 산업·경제분야를 전담하는 경제부지사 신설
- **일자리 사업본부 설치** 일자리정책을 전담할 일자리 사업본부 구성
- **산업·지역별 고용실천 전략 수립** 지역고용 여건 분석, 4년간 고용목표, 고용실천전략 및 추진과제, 일자리창출 목표 및 대책 수립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정부의 산업 인프라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최소화 방침에 따라 혁신성과 관련된 R&D·인력양성·기업지원사업 발굴 확대
 -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등 전담인력 지원 필요

기대효과

- 경제혁신·민생경제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발굴 및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구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 조속한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 주도적 일자리사업 추진

과제 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사업 확충

공약 3, 4, 5, 75
국가산단추진단, 미래융합산업과, 연구개발지원과, 도시계획과

과제목표

- ICT 융합을 통한 경남 핵심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향상
- 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 조성 및 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

주요내용

- **핵심산업 고도화** 항공우주·조선해양·나노융합·지능형기계·로봇산업·바이오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향상
- **G-MBP 개발** 경남의 주력 산업의 생산공정 표준화 및 통합스마트생산제조 시스템 구축
※ G-MBP(Gyeongnam Mechanical Business Process) : 스마트 팩토리 지원,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 **스마트공장**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 대·중·소 상생형 공동구축 및 동종업종 맞춤형 구축 컨트롤타워 구성, 전문인력 양성
- **스마트산단 조성** 스마트 통합지원 플랫폼(G-MBP) 구축·운영, 지능형 기반시설 구축, 창원국가산단, 김해대동산단 시범사업 추진
- **경남형 혁신인재 양성** G-MBP 연계 인력양성(스마트공장 및 제조혁신 플랫폼), 주력산업 SW·ICT 전문인력, 초중고 SW교육 →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주력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IT 및 R&D 역량 강화 필요
 -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기업 발굴 애로
※제조기업 실태조사로 희망기업 발굴 및 스마트공장협의회 등을 통한 홍보 확대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35,392	5,997	9,048	4,893	4,523	10,931	
스마트 공장·산단 및 인재양성	12,488	31	586	1,179	1,927	8,765	
핵심산업 고도화	22,904	5,966	8,462	3,714	2,596	2,166	

기대효과

- 경남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 스마트공장 2,000개 확대로 제조업 생산현장 스마트화 및 기업경쟁력 확보
- 제조업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로 기업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
-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과제목표

- 경남 R&D특구 조성 및 연구기관-대학-기업간 협력거버넌스 구축
- 경남형 R&D 혁신으로 지역 R&D 체계 선도모델 개발 및 지역중심 R&D 체계 구축
- 주력산업 관련 연구기능 집적화로 광역연구플랫폼 조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
- R&D사업화를 위한 기업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와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경부울(동남권) R&D 공동연구플랫폼 구축
-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대기업 R&D 센터 유치
-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
- 주력산업과 ICT 융복합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설립
- 소재부품 원천기술개발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연구단지 조성
- 제조업 혁신역량 공급을 위한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 설립
- 대학-기업간 연구협력 강화 및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은 TP ICT진흥본부 확대개편 또는 별도 법인설립
 - 소재부품 연구단지는 스마트시티 부품산업육성 공약과 연계 추진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4,643	3	260	1,018	993	2,369	
R&D 특구 조성	83	3	20	20	20	20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원	1,000	-	230	280	280	210	
소재부품연구단지조성	3,510	-	-	708	683	2,119	
중소기업 R&D사업화 센터	50	-	10	10	10	20	

기대효과

- R&D역량 강화로 제조업 기술혁신 및 산업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R&D 지원 원스톱 지원체계구축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과제목표

- 신항 중심 스마트 동북아 물류 전진기지 구축, 항만서비스자유구역 지정
- 동북아 물류 R&D센터 설치 및 융·복합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주요내용

- 동북아 물류산업 전진기지 구축 대형항만(10조원, 해수부), LNG 벙커링 기지(1조원, 해수부/민자), 자유무역지역 지정(200만㎡), 항만물류 연구센터 설치
 - 스마트(자동화) 항만 기반 구축, 북방협력 신규 화물 수요 연구 등
- 동북아 물류 R&D센터 및 융·복합 스마트 물류단지
 - R&D센터 및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방향성 확보를 위한 장기전략 용역 수립
 - 육상·해상·공항 스마트물류 구현을 위한 물류장비·정보화 관련 R&D 센터·생산단지 조성
 - 신선화물 등 콜드체인 물류단지, 제조업 기반 스마트 물류단지,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조성
- 항만서비스자유구역 지정 선박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 연계, 선박 입출항 및 선용품 공급 등 서비스 자유구역(무역항) 지정 추진

쟁점 및 재원계획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106,071	13	32	22	1,002	105,002	
동북아 물류산업 전진기지	106,068	10	32	22	1,002	105,002	국비/민자/ 도비(8)
동북아 물류 R&D센터 및 융복합 스마트 물류단지	3	3	장기전략 용역을 통해 사업비 산정				
항만서비스 자유구역		선박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 조성 후 해양수산부 건의					

기대효과

- 신항 중심 동북아 최대 항만 성장 및 스마트 항만으로 경쟁력 강화
 - 항만물동량 : '17년 2천만TEU→'30년 3천만TEU→'50년 4천만TEU 처리
 - 신규부두 : '17년 22선석→'30년 40선석→'50년 57선석 확보 및 스마트시스템 도입
-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제조업체 경쟁력 제고

과제목표

-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으로 낙후된 서부경남 경제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주요내용

- 노선 김천 ~ 합천 ~ 진주 ~ 고성 ~ 통영 ~ 거제(191.1km)
기간 2016 ~ 2025년, 사업비 5조 3,246억원 (추정)
- 1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10호(지역균형발전)
- 2안) 민자적격성 조사 경제성 확보 → 국가 재정사업 전환
 - (KDI) 논리적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주말수요 반영에 미온적임
- 검토의견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안(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 가장 바람직
 - 현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주말수요를 반영하여 경제성을 높이는 것도 의미 있으므로 1안과 2안 투트랙으로 추진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철도 건설에서 충분한 경제성 확보 곤란으로 경제성 향상을 위한 자료 발굴과 지역균형발전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

기대효과

- 8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과제목표

- 진주를 혁신도시 시즌2 선도도시로 육성
- 항공ICT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희유금속 첨단소재부품단지 조성, 항노화산업 육성

주요내용

- 이전공공기관 연계 특화산업 기업유치, 산업지원 중추도시 육성
 - 항공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지역인재 육성
- 센서·비행제어·항법계통 등 ICT와 융합한 항전분야 핵심기술 개발
- 경남 - 전남 광역경제협력을 통한 희유금속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 함경도 등 북한지역 자원연구·활용 등 남북경제협력 계획 수립
- 친환경·고내구성 세라믹 소재부품을 경남 주력산업으로 육성
- 지역전략 항노화산업 육성
 - 한방항노화산업 육성, 해양치유가능자원 발굴·실용화,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등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부서별 산재된 혁신도시 관련사업의 기능통합을 위한 조직 개편 필요
 - 국내 희유금속 매장량은 부족, 소재 전량 수입의존, 소재기업 부재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13,033.5	247.5	666.5	1,283.5	1,154.5	9,681.5	
국가혁신클러스터	721	38	125	150	150	258	
항공ICT 클러스터	5,303	3	-	530	530	4,240	
희유금속 클러스터	3,000	3	-	30	30	2,937	
항노화산업 육성	4009.5	203.5	541.5	573.5	444.5	2246.5	

기대효과

-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전략산업 육성으로 6.8조원의 생산유발 및 7,600명 고용창출 효과
- 항공전자 핵심부품 수입대체, 희유금속 수급을 통한 남북협력 강화

전략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과제 7

청년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 32~37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재정점검과

과제목표

-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 확충을 선도하고 청년들의 노동기본권 보호, 근로환경 개선 추진
- 청년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확충으로 지역정착 유도과 지역활력 제고

주요내용

-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및 채용비리 예방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청년의무고용 비율 확대(3%→5%) 및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 23개) 및 기업맞춤형 일자리 (기업트랙, 하이트랙, 해외인턴 등 기업연계 사업) 추진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 위반사례 모니터링,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해소 행정지원
- 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분리, 인원 60명, 교육장소 이전 등) 및 경남기반창업투자회사 설립 (창업투자회사(VC) 설립, 펀드 조성 100억원)
-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교육, 창업보육의 통합플랫폼)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공공기관 채용비리 종합대책 수립 및 청년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추진시 관련 중앙부처, 시군 협조 필요
 - 현 창업사관학교 지리적 접근성 불편(부산 인접), 청년창업 보다 일반투자 선호
-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1,193.5	179.5	245.5	322.5	322.5	123.5	
청년일자리 확충*	842	174	217.5	217.5	217.5	15.5	
청년 창업 지원**	351.5	5.5	28	105	105	108	

* 청년일자리 확충 :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트랙사업, 기업맞춤형 일자리, 청년근로조건 지킴이

** 청년 창업 지원 : 창업사관학교 유치, 창업투자회사설립,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기대효과

- 청년에게 적합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제공 : '18년 1,274개 → '22년 5,396개
- 청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유도 및 정착 : '22년 459개

과제목표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확충
- 5060 신중년 재취업을 위한 인생이모작 기반 구축
- 생계취약형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수당 인상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 확충(9→10개소), 창업지원 서비스, 인턴 인센티브 확대(기업·인턴에 취업장려금 30만원씩 추가 지급)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만50~64세 중장년층 대상 생애 재설계 상담, 취업교육 및 지원, 교양강좌 등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 **일자리더하기장려금 도입**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 신중년 고용장려금제도에 연장하여 도가 1년 추가 장려금 지원(1인당 월20~40만원)
- **창업지원학교 유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경남 유치
- 중년반 과정신설, 중년 창업 아이템 발굴,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지원
- **노인일자리 확대** 복지부 계획에 맞추어 '22년까지 누적 일자리 확대 연차적 추진
※ '18년 29,801개 → '19년 33,989개 → '20년 38,760개 → '21년 44,197개 → '22년 50,389개
-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월 40만원으로 연차적 인상 추진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6,864.4	801	1,092.1	1,325.1	1,623.1	2,023.1	
경력단절여성 분야	12.6	-	0.9	3.9	3.9	3.9	
인생이모작지원센터	50	-	26	7	8	9	설치비 20억원
일자리더하기장려금	28.8	-	7.2	7.2	7.2	7.2	고용부 사업량의 10%
노인일자리(총사업비)	6,773	801	1,058	1,307	1,604	2,003	

기대효과

-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확대('18년 13,055개 → '22년 14,692개)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재취업 여건 조성으로 신중년 일자리 확충('18년 60개 → '22년 1,300개)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확대('18년 29,801개 → '22년 50,000개)

과제목표

- 개별적 복지욕구에 부응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특성화된 맞춤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 개별적 가구특성에 맞는 24개사업, 412개 제공기관, 1,239명 일자리 창출
 - 수급자 및 장애인, 노인 등 차상위 계층 대상 7,841명 이용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신체수발, 신변활동, 일상생활지원
 - 만 65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46개소, 549명 일자리 창출
※ 연간 549명 이용, 만65세 이상 수급자는 노인돌봄사업 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출산회복 및 신생아양육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출산가정 대상 42개소, 556명 일자리 창출 ※ 연간 797명 이용
-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신규사업 발굴, 제공기관 지원·교육 등
 - 거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사회서비스 만족도 상승으로 수요자 증가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 마련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계	1,031.14	166.81	182.32	220.13	227.03	234.8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30.5	96.37	108.43	138.73	141.76	145.21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49.15	23.32	24.38	29.78	33.65	38.0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235.89	44.06	46.45	48.46	48.46	48.46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15.6	3.06	3.06	3.16	3.16	3.16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12개소 1,239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6개소 336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42개소 556명/ 사회서비스지원단 6명

전략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과제 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공약 66~71
경제정책과

과제목표

- 분야별 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 **경남페이 도입**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 서울시 등과 협업, 표준결제시스템 구축으로 수수료 0%대 실현
- **경남소상공인 사랑상품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상품권 활성화
- **경남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사회보험금 등)으로 사업주 경영부담 경감 및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 특별자금 신설 및 수요자 중심 자금운용 확대(1,000→1,500억원)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희망장려금 및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지원
- **소상공인 유통구조 선진화 지원**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 및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운영 활성화 지원(신규 1, 기존 3)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소상공인 성공사다리,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협업화, 소규모경영환경개선 지원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등

쟁점 및 재원계획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1,240.8	45.1	903.7	122.5	81.9	87.6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810	-	810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확대	202	20	38	48	48	48	
소상공인 비용절감매출증대 지원	20	-	6.5	4.5	4.5	4.5	
소상공인 사회안전망확충	90	2.5	14.8	18.2	24.4	30.1	
유통구조 선진화 지원	95	18.2	30	46.8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23.8	4.4	4.4	5	5	5	

기대효과

- 일자리안정자금 5만원 추가지급 → 소상공인 소득증대 효과(약 810억원)
-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을 통한 자생력 제고

과제목표

- 불공정한 거래 관행 근절로 대기업과 소상공인 등 동반성장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등 제정

주요내용

- **경남상생조례 제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으로 경쟁력 제고 및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불공정신고센터, 경남상생협의회 구성 등 포함
 - ※ 조례 제정시까지 발생하는 사안은 현재 운영 중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
- **경남상생협의회 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갈등해소 등의 심의 자문 역할, 세부구성 내용 등은 타시도 유사 위원회 운영 방식 참조
- **갑질신고센터** 가맹점 본점의 횡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 신고 및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갑질신고센터 설치
 - ‘경남 1번가’ 접수내용 중 ‘갑질’ 관련 사항은 갑질신고센터와 공유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기존 유사 성격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권한범위 등 제정
 - 불공정 신고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처리권한 등), 전담인원 검토

기대효과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기대

과제 12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공약 77~79, 81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과제목표

- 중소기업의 투자 증대 및 인건비 부담 경감, 인력난 해소

주요내용

- 시설·설비투자 확대** '22년까지 5,000억원으로 연차별 확대,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확대, 지원한도 상향(12→20억원)
- 경영안정자금 확대** '22년까지 5,000억원으로 연차별 확대, 지역위기산업 등 특별자금 배정 확대, 지원한도 상향(5→10억원)
- 경남 청년 채용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기업당 최대 50백만원(1인당 3백만원), 연간 2,000명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생애 최초 취업 청년에 적립금 지원, 신규취업 청년 1년 100만원 지원(3년간), 대상인원의 단계적 확대
※ '18년 1,621명, '19년 1,621명, '20년 2,621명, '21년 3,621명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연차별 자금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도비 확보

※ 대출 상환기간(경영 3, 시설 5)에 따른 이차보전금 누적으로 '22년 439억원, '27년부터 541억원 소요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2,038	263	369	409	468	529	
중소기업 자금	1,656	226	292	322	377	439	이차보전액
청년채용기업 환경개선	270	30	60	60	60	60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112	7	17	27	31	30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로 생산성 향상 및 민간 일자리 4년간 2만개 창출 확대
- 중소기업 청년 고용(연간 2,000명) 및 장기근속 유도('18년 621명 → '21년 3,621명)

과제목표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조례의 정비, 민관거버넌스 체제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로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가치 실현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제도 정비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 지역공동체과 조직 확대 및 담당 부서명칭 변경(지역공동체과→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위상 정립
-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
 -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관련 협의회 등 참여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거점 조성
 - 사회적경제 교육, 컨설팅 지원, 시제품 제작, 네트워크 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
 - 일자리재정지원사업 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경남사회적경제 디딤돌 정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속 발굴·지원
 -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공동브랜드 개발, 인증제도 추진, 혁신도시 등 공동구매추진단 설치
-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제정 추이, 당위성 등 종합적 검토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사회적경제조직 미약 및 도민 인식 약화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애로
 -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위한 당사자 조직 역량 부족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826	83.7	102.3	231	238	171	
사회적경제민관거버넌스 지원	10	2	2	2	2	2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358	-	15	138	139	66	
경남사회적경제디딤돌 정책	458	81.7	85.3	91	97	103	

기대효과

-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확대 '18년 819개 → '22년 1,271개

전략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과제 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공약 87, 88
농산물유통과

과제목표

- ‘지역푸드플랜’을 통해 로컬푸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친환경 공공(학교)급식지원 센터’ 건립·운영 및 영역확장으로 푸드플랜 실행

주요내용

- 경남 지역푸드플랜 수립
 - 친환경급식자재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 친환경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광역단위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 안전농산물 지원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활성화 등 포함 계획 수립
- ‘공공형(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전 시군으로 확대(현재 김해, 거창 2개소)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비로 ’20년부터 3~4개소씩 연차별 건립
※ ’19년 도시군비 사업으로 1~2개소 건립
-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사군간 농산물 물류시스템 보강
 - 우선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1개소를 설치하고 필요시, 서부북부 권역 추가 운영
- ‘경남-서울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 및 참여(서울시 친환경급식과와 협의)
 - 경남도와 서울시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통합하는 ‘친환경 급식자재 공공조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급식 기준을 충족하는 식자재를 공급·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전 사군에 ‘공공형(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농업기반이 취약한 사군은 인근 사군의 급식센터에서 급식재료 공급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358	2	46	66	66	178	
경남 지역푸드플랜 수립	38	2	6	6	6	18	
공공급식센터 건립	320	-	40	60	60	160	

기대효과

- 지역농산물이 급식에 공급되므로써 친환경농업, GAP 농산물 등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재료 조달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구조 구축

과제목표

- 도내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도모
- 농업·농촌의 환경 및 경관 보전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여 보상

주요내용

- 경남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최저가격 보장
 - 농산물 최저가격 기준 설정 및 최저생산비용 이하 가격 하락시 소득안정화 대책 수립
- 지속가능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추진
 -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친환경농업 실천마을 및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
 - 소비가 많은 품목이나 친환경 실천이 어려운 작목에 대해 생산비 또는 장려금 지원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최저가격 보장 품목 선정의 어려움과 작목별 생산주체 간 의견상충 조율
 -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협약조건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155	-	27	27	50.5	50.5	
친환경실천마을장려금	120	-	20	20	40	40	19~20: 1천마을, 21년이후: 2천마을
친환경실천농가 장려금	35	-	7	7	10.5	10.5	19~20: 2천농가, 21년이후 : 4천농가

기대효과

- 과잉 생산 시 수급불안정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산비, 가격보장
- 농촌환경 보전과 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와 건강한 먹거리 안정생산

과제목표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과 농업혁신을 이끌 스마트 농업인 육성

주요내용

- **청년 취농인턴제** 농업법인의 청년인턴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 40~45세 미만 미취업 청년층, 농업계고 3학년 재학생 대상
 - ※ 18~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정부 사업(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대상
- **청년 취농직불제** 신규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금 등 지원대상 확대
 - 정부가 지원하는 연령대 외 40~45세 미만 구간 지원
 - 도 자체사업인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취농직불제 사업으로 확대·전환
- **경남형 스마트 팜 조성 및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 농업인이 주도하는 적정규모의 경남형 스마트 팜 조성사업 추진
 -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층 대상 체계적 기술교육 시행
-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청년에게 스마트팜 시설 운영 경험과 기술습득 기회 제공
 - 도내 12개소(개소당 2,000㎡) 조성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지속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과 임대농장조성을 위한 재원 확충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94.4	10.4	23.6	23.6	23.6	13.2	
청년취농인턴제	4.8	-	1.2	1.2	1.2	1.2	
청년취농직불제	48	-	12	12	12	12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5.6	1.4	1.4	1.4	1.4	-	
경영실습임대농장조성	36	9	9	9	9	-	

기대효과

- 청년 영농정착 지원으로 농업·농촌에 청년을 유입하여 미래농업의 인적 성장동력 확충
- 스마트팜을 선도할 전문농업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농업기술력 제고

과제목표

- 민관협치기구인 농어업특별위원회와 농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통해 농어민이 농어업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농어민 참여예산제로 농어민을 위한 예산 편성

주요내용

- 가칭 '경남 농어업 특별위원회' 설치
 - 구성 : 행정, 의회, 농림어업인단체, 선도 농림어업인, 소비자단체 등 30명 정도
 - 운영 : 수시회의 및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 역할 : 도지사 직속 농림어업정책관련 민관 협치 기능
- 농어업회의소 설치
 - 현황 : 거창, 남해 설립·운영 중, 고성은 설립 준비 중
 - 광역 및 시군 농어업회의소 단계별 설치 : 16개소(도 1, 시군 15)
※ (1단계)시군 농어업회의소 확대(15개 시군) → (2단계)도 협의회 설치
 -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률 발의로 법제화 추진 중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농어업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농업, 임업, 어업분야 통합 위원회 운영 방안 협의
 -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법제화가 되지 않아(법안 계류 중) 추진동력 부족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운영비 확보 필요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10.8	0.3	2.1	2.1	2.1	4.2	
위원회 운영비 확보('18년~)	3.3	0.3	0.6	0.6	0.6	1.2	
농어업회의소 설치 지원('18년~)	7.5	-	1.5	1.5	1.5	3	

기대효과

- 현장중심의 농림어업정책 개발 및 농림어업인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 농림어업인, 소비자, 행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치 실현

과제목표

- 첨단 양식산업 육성을 통한 어촌 6차산업화로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패류 양식산업 육성
 - 패류산업 연구지원 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해역별 특화 단지 조성
 - 생산, 가공, 위생, 유통, 수출 통합형 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
 - 패류산업 연구지원 센터 건립을 위한 정부공모사업 추진('18. 8월~)
- 스마트 양식단지 1개소 조성
 - 자동화, 지능화 시스템을 갖춘 첨단양식단지 조성
- 어촌 6차 산업 확대
 -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어업외 소득 등 자생력 도모
 - 사업방향·사업규모 등 해수부 및 시군 협의('18. 8월~)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
 - 시군의 적극적 협력유도와 재원의 우선적 확보 필요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이후	비고
계	1,315	10	54	365	365	521	
패류 양식산업 육성	700	-	10	175	165	350	'19년~'23년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300	-	24	90	90	96	'19년~'22년
수출물류단지조성 (수산식품거점단지)	200	-	10	90	100	-	
어촌6차 산업 확대	115	10	10	10	10	75	

※ 해수부 및 시군과 협의 등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기대효과

- 패류양식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 증대 및 수출시장 개발 및 수출 증대
 - (굴) 8,000톤, 6천만불 수출, 22,000명 고용 → (품종 확대)25,000톤, 1억 5천만불, 30,000명
- 고부가 수산식품 개발을 통한 수산식품산업 육성으로 어촌 6차 산업화 실현
 - 수산식품거점 단지 조성 → 지역별 어촌 6차 산업화와 연계, 활성화

4 목표 2 : 사람 중심 경남 복지

- 도민들의 삶의 질은 경제적인 재도약을 통한 물질적 만족만으로 좌우되지 않음
- 생존과 안정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복지수요가 충족되어야 함. 이와 더불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일체감, 위험의 공유와 분담을 통한 안정감, 신체와 정신을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적 쾌적함 등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 이외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
- 나아가 개인의 이익과 행복만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간에 서로 나누고 (공유경제) 배려(사회적 가치)하는 분위기가 넘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임

Ⅰ 전략 Ⅰ

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4.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

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조성

전략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과제 19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공약 26~28, 31
교육지원담당관

과제목표

- 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 보장
- 생애주기 평생학습체계 구축

주요내용

- **친환경무상급식**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및 학교급식의 질 제고
 - 무상급식 고등학교 확대 및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 공급체계 마련, 비유전자변형식품 식자재사용 등 교육청 협의('18. 7월~)
- **무상교육**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 지원방법·범위 등 교육청, 시군 협의('18. 7월~)
- **온종일 돌봄** 돌봄교실 전학년 대상 2시간 확대 운영
 - 사업방향·사업규모 등 교육청 협의('18. 7월~)
- **평생교육·사회교육**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을 실질적인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교육청의 적극적 협력유도와 기존 사업들과의 합리적 재원배분방안 검토 필요
 - 친환경무상급식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향후 추진방안 등과 함께 검토 필요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계	2,672	256	584	584	624	624	
친환경무상급식	2,492	256	559	559	559	559	범위확대분담비조정 196억원, 단가인상 107억원
실질적무상교육확대	160	-	20	20	60	60	수학여행 20억원, 교복·체육복 40억원
경남형온종일돌봄	20	-	5	5	5	5	

※ 교육청과 시·군·자치단체 협의, 식품비 인상비율 등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기대효과

- 무상급식 확대 및 교복,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
 - 무상급식 확대 : 869개교 27만명 → 974개교 34만명
 - 체육복·수학여행비 지원 : 연 9만명(초·중·고) / 교복 지원 : 연 6만명(중·고)

과제목표

- 경남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수립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 조성

주요내용

- **청년정책 추진체계**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내실있는 청년정책 추진
 - 전담 조직(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신설
 - 청년정책위원회(청년사업 심의·조정) 운영 내실화
 - 청년 네트워크(청년사업 발굴·평가 등) 구성 및 운영
 - 과제 추진 부서(청년사업 실행) 간 유기적 협조체계 마련
- **청년터 조성** 청년층 수요를 고려, 도내 권역별 4개소 조성 추진
 - 공모방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터 조성사업 시행
 - 개소 당 조성사업비 5억원 한도로 도비 지원
 - 청년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활용도 높은 청년공간 조성
- **주거복지 확대** 청년 1인 가구 대상 셰어하우스, 신혼부부 주택 우선 공급 및 지원

쟁점 및 자원계획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계	35.05	0.25	8.7	8.7	8.7	8.7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3.05	0.25	0.7	0.7	0.7	0.7	'18. 하반기 구성
청년터 조성	20	-	5	5	5	5	연차별 1개소 조성
주거복지 확대	12	-	3	3	3	3	

기대효과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청년 네트워크 강화
- 청년이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청년문제 포함) 해결을 위한 참여 활동 촉진

과제목표

- 저출생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출산·보육의 공적 책임강화, mam편한 육아환경 조성

주요내용

- 도지사 직속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설치
 - 정책 기획, 논의, 시행, 평가 등 도 단위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체계 강화
- 경남 'mam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 보건소, 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공간 통합 및 연계로 결혼·임신·출산·육아 서비스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시범운영·연차별 확대 추진)
-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1개소(밀양) 설치·운영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권역별 확대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이상 확대
 -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 확충
- 보육료 차액 지원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 부모부담 보육료 50% 지원('19년~'21년) → 100% 지원('22년)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긴급육아공공가사도우미 파견
 - 공동육아나눔터 '18년 18개소 → '22년 26개소 확대로 지역형 돌봄체계 구축
 - 긴급(당일)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추진(자율운영...의무운영) 및 만2세이상 미취학아동 맞벌이가정 가사도우미 제공, 일·가정 양립 지원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공기질 개선 도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100% 설치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위원회 설치시 운영지원 전담부서(인력) 필요,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사업비 과다 소요
 - 공공산후조리원 민간 산후조리원의 반발, 이용료 감면 예산 부담
 - 보육료 차액 지원 시 국공립 전환 관심 저하로 국정과제 이행 부진
 - 가사도우미, 행정절차(사회보장신설 협의 등) 이행 및 운영시스템 개발 필요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계	2,683	262	457	424	666	874
'mam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120	-	40	-	40	40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86	-	20	4	24	3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22	66	182	202	383	489
보육료 차액지원	462	2	93	93	93	181
공동육아나눔터확충	58	7	10	13	14	14
긴급육아·공공가사도우미	559	111	112	112	112	112
공기청정기 설치	76	76	-	-	-	-

기대효과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율 제고로 경남도의 지속 발전 도모

과제목표

-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주요내용

-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서부경남권 의료취약지 거점 공공병원 확충(300병상)
- 읍면동 단위 공공보건시설부터 대학병원까지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만성질환에서부터 5대 중증질환 및 응급환자까지 거주지역 인근 1시간 내 진료 및 처치가 가능한 통합 의료벨트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1개소, 156억원(국비 78, 지방비 78)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 전 시군 치매안심센터 개소(20개소) 및 운영비 지원
※ 치매안심마을: '17년 함안군 대암마을, '18년 거창군 영승마을 추진중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생아, 독거노인 가구 등 대상 주기적 방문 건강관리
- 권역별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 공립요양병원에 권역별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표준화사망비 높은 동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신축 2, 리모델링 2) 확충
- 맞춤형 돌봄의료 '찾아가는 진료버스' 농어촌 순회 무료진료 및 경남 365안심병동 확대

쟁점사항(장애요인)

-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종합대책 발표('18.하반기)후 계획 수립
- 경남 의사회·민간의료기관과의 지속적 협의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직원 고용안정

조치사항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3,402.5	239.5	631.4	713.6	896.8	921.2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신설	1,000	-	200	200	300	300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및 운영	354.5	32.5	44.5	92.5	92.5	92.5	
권역 외상센터(헬기장 설치비) 지원	10	-	10	-	-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	156	-	16	54	86	-	
방문건강관리전담공무원채용	412.1	33.3	43.6	59.8	77	198.4	
치매안심센터 확대운영	902	102	200	200	200	200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44	8.8	8.8	8.8	8.8	8.8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54	-	25	2	25	2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 사업 지속 확대	16	-	4	4	4	4	
찾아가는 진료버스	6.9	0.9	1.5	1.5	1.5	1.5	
경남 365안심병동 확대	447	62	78	91	102	114	

기대효과

- 경상남도 권역별 자체충족 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공공성 강화, 만족도 향상 및 건강증진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으로 장애아동 재활증진, 부양 가족 부담 완화
- 보건의료정책결정에서의 도민 참여 기전 확보(40개 읍면동 건강위원회)

전략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과제 23

노동자 권익 보호

공약 83~85
기업지원과, 재정점검과, 일자리창출과, 서민복지노인정책과

과제목표

- 노동전담부서, 이동노동자 쉼터,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설치로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

주요내용

- **노동전담부서 설치** 노동인권 보장, 노동자 권익개선 등 다양한 노동정책 추진 전담부서 설치(노동정책, 노사협력, 노동복지 등 3개팀), 노동정책 모니터링, 책임자 공모 검토
-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19년 1개 조성, 시·군 수요에 따라 3~4개소 확대
- **돌봄노동자 상담 및 건강센터 설치**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 대상 직업상담, 건강관리·지원으로 취약노동자 의료접근성 제고·건강권 제고 및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설치** 상담, 치유, 교육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상담센터 설치 또는 정신건강센터 및 근로자건강센터 활용 방안 검토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파견·용역근로자 등 정규직 전환, 민간부문 고용관행 개선 유도
-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상담·법률지원, 실태조사 및 취업정보 제공
- **생활임금**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도입(조례 제정 등)하여 민간 확산 유도
- **노동이사제** 도입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정관 개정, 일정 규모 이상 기관 우선 시행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정신건강·감정노동·트라우마 등 분산된 치료센터의 통합운영 검토 필요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136	2.5	28.5	32	35	38	
이동노동자 쉼터	71	-	14	16	19	22	
감정노동자상담센터	51	-	12	13	13	13	
비정규직근로자센터	14	2.5	2.5	3	3	3	

기대효과

-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근로여건 개선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

과제목표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성평등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주요내용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양성평등위원회 기능과 역할 재조정,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여성정책연구개발 기능 강화
 - 성평등위원 구성인력 및 당연직 확대
 - 여성가족정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설립
 - 도 여성 특보 신설
- **성평등의식문화 확산** 양성평등 교육 강화, 공무원(재직, 신규)과 농어촌지역민, 소외계층 등 대상 성평등·성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
- **여성의 대표성 제고** 위원회 여성 참여율 40%달성(2020년), 여성지도자양성 과정 및 여성지도자 심화과정 운영, 5급이상 여성공무원 20%달성(2022년)
- **젠더폭력방지 기반 구축**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남 구현
 - #WithYou 지킴이단 구성·운영('19년 전시군 확대)
 - 경남 여성폭력사이버 상담 창구 운영(1366경남센터)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가폭·성폭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준용률 적용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목표 설정(73~77% → 99%), 연차별 확보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256.5	39	52.5	53	55	57	
여성가족정책 연구기능 강화	0.5	-	0.5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산정			
종사자처우개선	256	39	52	53	55	57	

기대효과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로 경남 성평등지수 향상
-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과제목표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과 장애인 일자리 및 우선구매 확대를 장애인의 자립기반 강화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관련 조례 제정 추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관련 조례제정 : 장애인단체와 협의 후 '18년 말 조례안 확정 및 '19년 초 제정 추진
 - 인권침해 실태조사 : 대상, 방법, 소요예산 등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모델 개발('19년) 후 '20년부터 3년마다 실시
-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우선구매 활성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및 경영컨설팅 실시로 직업재활시설(생산시설 포함)의 경쟁력·수익성 강화, 생상품목의 다양화 모색으로 장애인일자리 확충
 - 경상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판매기반 강화,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방안 강구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조례안 일부조항에 대한 장애인단체 간 입장차이 조율 및 공감대 형성 필요
 - 각종 구매제도의 혼재, 부서의 관심 부족 및 구입의 편의성 추구
 - 생산시설의 영세성, 생산제품의 다양성 부족으로 실제구매 한계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계	817	147	157	163	171	179	
인권침해 실태조사	1	-	1	-	-	-	- '19년 연구용역 실시 - '20년부터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비용 예산 계상
장애인일자리 확대	816	147	156	163	171	179	일자리 참여인원 확대 및 단가 인상 적용

기대효과

-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
- 장애인일자리 확대, 우선구매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통합 도모
 - 장애인일자리 : '18년 1,290명 → '22년 2,000명 / 우선구매율 : '18년 0.6% → '22년 1%

과제목표

- 읍면동 복지센터 신설 및 사회복지전담 인력확충
- 임플란트, 관절수술, 대상포진예방접종 비용지원으로 노인의 의료보장 공공성 강화
- 원스톱 거점형 노인복지기관 어르신센터 설치 및 돌봄전문복지사 배치

주요내용

-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예방접종 비용지원
 - 저소득층 노인의 임플란트 및 틀니 수술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11,800명)
 - 만성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인한 무릎·고관절 인공치환술 지원(400명)
 - 도내 65세이상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513,331명)
- 어르신센터 설치 노인(사회)복지관에 설치하여 의료, 돌봄, 보호기능 보강
- 복지센터 신설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및 복지전담팀 설치
-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 복지전달체계 마련
-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 '22년까지 도민 1천명 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 실현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전담공무원 충원에 따른 시·군별 정원 조정 애로(도 및 시·군 정원 별도 운영)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계	1,200	30	151	313.4	335.4	370.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채용	700	-	70	210	210	210
임플란트·틀니 수술	203	28	34	35	35	71
관절수술비 지원	24	2	4	4.4	4.4	9.2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70	-	15	15	20	20
어르신센터 설치운영	203	-	28	49	66	60

※ 대상포진 접종비용 지원사업은 대상자 중 선별적 실시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기대효과

-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찾아가는 지역복지서비스 중심으로 기능 전환
-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저소득노인 대상자의 건강형평성 유지

전략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과제 27

최적의 대기질 관리

공약 98~100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과제목표

-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권 확보

주요내용

- **대기측정망 확충·운영** 대기오염 예경보 체계 기반 조기 구축(미세먼지 조레 제정)
 - 대기오염측정망 연차별 확대 및 자동발령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예경보체계 구축
 - 도·교육청 협업방안 강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시 공동대응 매뉴얼 개발
- **대기질 관리** 미세먼지 오염원 저감 및 비상 저감조치를 통한 도민 건강 보호
 - 오염원 조사 미세먼지 오염원 조사 및 우심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모니터링 실시
 - 오염저감 MOU체결 배출사업장 오염저감 MOU 체결 및 사업장 관리 철저
 - 비상저감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 경남형 비상저감조치 실시
 - 대기오염총량제 실시 대기오염물질을 환경용량 이내로 규제(중장기 과제), 법안 통과 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에 따른 운영예산 증가 및 관리인력 부족으로 대책 강구 필요
 - 수송분야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과도한 재정투입 부담으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필요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계	2,960	564	688	555	580	573	
대기측정망 확충	36	10	12	10	-	4	22개소 → 40개소
주민건강영향조사	18	6	6	6	-	-	발전 2개소 주변
미세먼지 저감 협약	485	239	246	-	-	-	'19. 협약 종료 후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	2,090	258	366	468	504	494	16,660대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331	51	58	71	76	75	17,860대 지원

기대효과

-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 강화**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피해 최소화
 - 대기측정망 확충 : '17년(22개소) → '19년(33개소) → '20년(38개소) → '22년(40개소)
-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친환경차 보급확대 : '18년(4,036대) → '22년(16,660대)/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18년(3,878대) → '22년(17,860대)
- **대기질 통합관리 운영**을 통한 도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

과제목표

- 낙동강 수질 향상을 위한 오염원 관리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지속 추진
 - 목표수질 : 창녕 남지 기준 BOD 2.3mg/L, T-P 0.040mg/L 이하 유지

주요내용

- **환경기초시설 지속 설치** '18년 하수처리장 42개소, 하수관로 28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2개소 추진
 -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 등 조성 : 4개소
- **오염하천 개선사업** 생태하천 등 수질개선사업을 오염하천에 집중투자
 - 함안천, 석교천(함안), 창녕천, 계성천(창녕), 화포천(김해), 아천천(합천), 초동천(밀양)
- **녹조 발생 선제적 대응** 하천 수질모니터링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 녹조발생우심지역(Hot-spot) 지자체 책임관리제 추진 : 9개 시·군, 9개소
- **점·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폐수·가축분뇨, 하천쓰레기 등 수계오염원 중점 관리
 - 폐수·가축분뇨 점검 강화, 하천쓰레기 수거, 농촌지역 비점오염 교육·홍보
 - 하절기 하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강화 운영(시설별 5~20%) : 54개소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질모델링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유역관리
 - 3단계('16~'20년) 총량관리로 배출부하량 저감 및 목표수질 관리(15개 시·군)
- **낙동강 보 개방** 낙동강 보 개방 및 재자연화계획 수립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낙동강 본류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총인(T-P) 농도가 여전히 높아 수온 상승, 체류시간 증가 등에 따른 녹조 지속 발생으로 낙동강 수질개선 집중 투자 필요
 - ※ 총인 농도(남지) : '12년 0.098mg/L → '17년 0.038mg/L(OECD 부영양화 기준 : T-P 0.035mg/L)
 - 지리산댐 건설과 남강댐 부산 물공급문제 대응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14~'16년)	'18년	'19년	'20년	비고
계	3,783	9,399	1,472	1,156	1,155	
환경기초시설 지속 확충	3,783	9,399	1,472	1,156	1,155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5개 시·군 7개 하천		석교천(함안), 의령천(의령, '19년~)			
녹조발생 예방 대책 추진	취·정수장 운영 강화(주1~2회), 수질모니터링(본류8, 지류7)					
점·비점오염원 관리강화	폐수·가축분뇨배출업소 수시 점검, 농업인 대상 비점오염 교육·홍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매년 이행평가 및 시행계획 변경 등('18년 4단계 기본계획 수립)					

기대효과

- 낙동강 수질개선을 통한 수자원 안정적 공급 및 수돗물 신뢰도 제고
 - 창녕 남지 목표수질 달성(mg/L) : ('13년) BOD 2.4, T-P 0.059 → ('20년) BOD 2.3, T-P 0.040 이하
 - ※ 장기적으로 BOD Ⅰb등급(좋음), T-P는 0.035mg/L 이하 유지를 최종목표로 수질개선 추진

과제목표

- 깨끗하고 쾌적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삶의 질 향상
-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육성 도모

주요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경로당, 저소득층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유희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주민참여 사업 확대 지역주민 주도의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지붕 등 태양광발전 단지 발굴 및 조성으로 주민수용성 확보
-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수력 발전 등 대규모발전단지 조성
-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수립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기획·발굴하여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선제적 대응
-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구 구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구 설치
- 수소사회 실현 기반 구축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 노후경유버스를 수소버스로 대체 및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관광산업과 수소에너지 연계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관련 반대 민원으로 추진 애로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73,763	1,171	1,232	3,030	3,083	65,247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280	438	482	530	583	5,247	국비/지방비/민자 41/46/13
민간투자 사업	66,483	733	750	2,500	2,500	60,000	민자

기대효과

-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
- 태양광 및 풍력 등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원 발굴 보급 : 2025년 1차E 소비 대비 12.0% 달성
-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 2025년 최종E 소비 대비 14.0% 달성
- 온실가스 저감대책 공유 확산 : 2025년 BAU 대비 20.0% 절감

전략4: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

과제 30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공약 104~108
문화예술과,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과제목표

- 주민 주도의 문화예술정책 추진과 기관별 전문성 강화로 연관산업 육성
- 자생적 예술활동 지원 기반 마련을 통한 예술인 복지확대와 권익신장

주요내용

- **문화역량 강화** 경남의 문화예술 역량 확충으로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거버넌스 형태의 문화예술협치위원회 구성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영상산업 육성 등을 위한 기능 정상화 대책 마련
 - 경남 예술지형과 특성에 맞는 1~2개 분야의 경남도립예술단 창단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성공 모델 발굴·보급과 지속적 사후관리 지원
- **경남정신 확립** 가야사 연구복원('18년~'37년), 경남학·남명선비문화·유교문화 계승발전
 - 경남학 연구센터 설립·운영, 유교문화자원 보존 기반구축, 남명학 심층연구 강화 등
-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및 창작환경 개선
 - 경남예술인 그라민 금고 설치로 저금리 예술활동 자금 대출 지원
 - 예술인 생활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한 예술인복지센터 설립 및 관련 조례제정
 - 창작공간 지원조례 제정, 경남음악창작소 조성 및 도시재생지 등 유휴공간 활용, 창작공간 (경남예술창작센터) 확대 및 공연지원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창단 예술단 장르(분야) 선정 시, 단체별 이해관계 대립
 - 신용보증 제도상 비사업자 예술인의 대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12,162	548.35	1,184.6	1,666.05	1,586.5	7,176.5	
문화역량 강화	635.15	196.75	132.1	102.1	102.1	102.1	
경남정신 확립	11,335	330	1,008	1,531	1,443	7,023	
문화기본권 보장	191.85	21.6	44.5	32.95	41.4	51.4	

기대효과

- 부문별(문화예술, 콘텐츠, 영상산업 등) 역량 강화로 경남경제 회복 견인
- 예술인 창작환경 및 복지 개선으로 창작 활성화

과제목표

-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조성으로 도민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주요내용

- 창원마산야구장 조기 건립 지원 도비(100억 원) 추가지원으로 야구장 조기건립 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시군 장애인체육회(부) 설치(2개소 → 18개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확대('18년 22명 → '22년 70명) 등
- 장애인 체육관 건립 정부 공모를 통해 장애인 체육관 건립 유치, 도내 거점별 장애인 체육관 건립('22년까지 3개소)
- 이동약자를 위한 체육 편의시설 확충 '18년(62%) → '22년까지(95%)
-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 속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체육시설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프라 개선

쟁점 및 자원계획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1,025	647	55	80	117	126	
창원마산야구장 조기건립	615	615 (민간40 포함)	-	-	-	-	기투자 포함 총사업비 1,240억원
장애인체육관 건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편의시설 확충	410	32	55	80	117	126	

기대효과

- 창원마산야구장 조기건립 지원을 통해 350만 도민의 야구 인프라 구축
 - 관중 50% 확대 : 연 47만명(72경기×6,500명) → 72만명(72경기×10,000명)
 - 가족공원, 버스킹공연 등 테마파크형 야구장으로 365일 도민에게 개방
- 장애인 체육관 건립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16%→26%) : 30,000여명('17년)→47,000여명('22년)

과제목표

- 경남 관광자원을 건강과 휴식을 융합한 콘텐츠로 개발,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과 지역관광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획기적인 관광객 유치

주요내용

- 힐링 휴양관광 상품개발 및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 코리아둘레길(4,500km) 연계 남해안 도보여행길(642km) 조성,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섬진강 뱃길복원
-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자연생태 관광자원 개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8개소 → 11개소), 야영장 및 유원시설 안전 점검(연2회), 관광종사원 친절교육(68회 → 75회) 및 지리산 둘레길 등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14개 사업)
- 전략적 관광마케팅** 관광마케팅 전담기관 설립, MICE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관광객 유형별 마케팅 추진, 경쟁력 있는 명품 축제 육성, 테마별 관광자원개발(30개 사업)
 -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협의체 적극 협력(경남 MICE·관광포럼 등)
- 열린 관광 1번지 조성 등 이동약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광지 확대**(5개소 → 10개소), 관광사회적기업 활성화, 관광서비스 고도화(빅데이터, AI 등), 경남관광 PASS APP 운영, 무료 와이파이(80개소 → 177개소) 등 구축
- 관광두레 활성화** 지역주민의 자발적 관광사업인 관광두레 확대(18개소 → 24개소)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마케팅 전담기관 설립자본과 조직운영 비용 등 자원부담과 수익사업 발굴 애로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14,640.6	1,296.4	1,006.2	1,011	991.4	10,335.6	
힐링 휴양관광 상품개발 및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	11,340.3	668.5	345	351.8	319	9656	
관광환경 조성 및 생태관광 자원개발	650	132	134	126	128	130	
열린관광지, 스마트 시스템 및 관광두레활성화	134	16.6	30.4	28.6	29.5	28.9	
전략적 관광마케팅	2,516.3	479.3	496.8	504.6	514.9	520.7	

기대효과

- 힐링관광 목적지로서의 경남 브랜드 확산과 관광객 유치 증대
- 경남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16년 700만명 → '22년 1,000만명)

전략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과제 33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공약 3
도시계획과, 연구개발자원과, 경제정책과

과제목표

- 도시재생뉴딜사업 집중지원 및 경남형 재생사업 추진
- 에너지 자립마을 및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 도입

주요내용

-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마을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행정·상업·문화 등 핵심 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주변지역의 성장을 유도
- 지역의 경제 생태계 활성화 도시재생 경제조직과 민간(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지원하여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등 지역역량 강화·주민 참여 기반마련·지역 구성원 간 상생협력으로 공동체 회복
- 에너지 자립마을 및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도입 유희부지 및 공공건물 지붕 등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 전기생산 공급 및 특화형 스마트 시티사업 추진
 - ※ 스마트파크, 대중교통정보체계, 음식물쓰레기, 방범CCTV, 화재감시,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등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민간 전담인력 부족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5,550	391	596	1,007	1,190	2,366	
도시재생뉴딜 본사업	5,400	361	566	977	1,160	2,336	국비:도비:시군비 60:12:28
도 자체스타트업사업	150	30	30	30	30	30	도비:시군비 50:50

기대효과

-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활력회복
 -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공모사업 7개소 선정, 도자체 스타트업 사업 3개소 추진

과제목표

- 종합적 도시디자인 정책수립 강화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적 설계) 도입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도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주요내용

- 도시디자인 종합적 기획 및 정책수립
 - 도시 계획, 공공 디자인, 경관디자인, 옥외 광고물 디자인, 셉테드 등 다양한 디자인 통합, 전담조직 신설 필요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문화예술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포함 검토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시민·사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함께하는 또래문화를 줄일 수 있는 유니버설 놀이공간 마련, 신규 관광지 조성 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저상버스 보급 확대
 - 기존 버스 대차·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저상버스 이용가능 도시환경 구축

쟁점 및 재원계획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 통합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실시('18~'19) : 1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1	1	-	-	-	-	
통합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18~'19)	1	1	용역 결과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및 공공청사 등 시설 개선사업비 산정				

기대효과

-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과 정비를 통한 사회적 약자가 배려된 기능적 도시 구현
- 시설이용약자를 배려한 도시환경 구축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도민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원활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

과제목표

- 광역교통체계 확충으로 물류·수송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민 교통복지 개선

주요내용

- 광역급행버스 도입 및 복합환승센터 설치 광역교통법 및 운수사업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반영, 광역교통망 확충 등
- 광역환승 할인 확대 대상지역 확대(김해↔창원↔함안) 추진
 - 1단계 창원↔김해, 2단계 창원↔함안
- 동남권 광역교통기구
 - 부울경 협의를 통하여 동남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도내 유치 홍보 등
- 100원 택시 벽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 택시' 시행
-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개통 현재 공사중인 경남구간 복선전철화 '21년 완전 개통 추진
과 전남구간 전철화 조속 추진을 위한 경남-전남도 공동 노력 및 협조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광역급행버스, 복합환승센터 확충은 국토부 권한으로 지자체 간 독자 시행에 한계
 - ※ 도내 시군 간 환승할인제 도입도 재정부담 등 시군 입장 차이로 협의 지연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324.93	23.9	67.4	61.64	65.01	106.98	
광역환승 할인 확대	182.53	-	39.90	32.74	34.71	75.18	
100원 택시 확대	142.4	23.9	27.5	28.9	30.3	31.8	

기대효과

- 광역권의 원활한 교통행정 및 광역환승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도모
- 오자·벽지 등 교통취약지역 교통복지 증대
 -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600개소 이상 발굴 등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안전정책과, 교육지원담당관, 경제정책과, 재난대응과, 예방안전과, 방호구조과

과제목표

- 범죄,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한 삶 기반 조성 기여

주요내용

- 범죄환경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 범죄발생 우려지역 예방활동 강화
 - 사물인터넷 활용, 여성·어린이 안심 알림서비스, 지능형CCTV 등 설치
- 안전감시단 도입
 - 안전 감시단(보안관) 운영, 생활주변 안전관리 및 위해요소 신고 등
-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 강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강화 등 예방 시스템 구축
 - 지진 대비 매뉴얼 강화와 예방 인프라 확충(지진관측소, 지진가속계측기 증설 등)
- 화재방재 대비시스템 강화 화재안전제도와 대비시스템 개선과 고도화, 시설 기준 강화, 사전 예방과 관리체계 개선, 민관협력 강화, 개인과 사회 안전역량 제고
 - 군단위 소방센터 확대, 방호기능 및 의용소방대역할 강화
- 전통시장 화재 안심 모니터링 시범 사업 노후된 시설, 전기 등 예방, 보완 공사, 대응 체계 구축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 학교건물 내진보강 및 스프링클러 학교 내진성능 확보 추진 및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쟁점사항(장애요인)

- 범죄 사각지대 지능형 CCTV 사군별 서버 상이 및 도 통합관제센터 장소 확보 등 필요
- 안전시설 기준 개선 등 대부분 정부 입법사항으로 자체 추진 한계

조치사항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1,517.8	146	275.7	348.7	373.7	373.7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246.8	-	61.7	61.7	61.7	61.7	
우리동네안전지킴이(AI)	4.5	-	1.5	1	1	1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 강화	1,221	146	200	275	300	300	
전통시장 노후시설 전기 등 개선	41	-	11	10	10	10	
생활안전망 강화 사업 예산	4.5	-	1.5	1	1	1	

기대효과

-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지진, 화재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한 경남 실현
 - 안심 알리미서비스 구축운영 등(18개 시군), 안전감시단(보안관) 700여명, 동네안전 지킴이(AI) 앱 제작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18년~'22년) 594개소
 -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경제적 손실 저감

5 목표3 : 함께 여는 혁신 도정

-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도정의 운영철학과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
- 오만과 독선과 불통의 도정이 아닌, 공감과 겸손과 소통의 도정으로 변화가 요구됨
- 보다 합리적인 조직체계와 공정한 인사를 바탕으로 한 공직내부의 혁신과 도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기회가 넓혀져야 할 것임
- 이러한 변화를 통해 도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민의 도정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져 경남이 살만한 곳, 완전히 변화된 곳으로 거듭나게 될 것임

Ⅰ 전략 Ⅰ

1. 참여민주주의 확대로 만드는 사회혁신

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

전략1: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만드는 사회혁신

과제 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공약 113
행정과

과제목표

-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와 직접 민주주의 강화
- 도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등 주민 발의권 보장

주요내용

- **주민소환제** 현행의 엄격한 주민소환 조건을 완화하여 소환사유 발생 시 용이하게 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제**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투표 사안 발생 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
- **조례발의제도** 자치단체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조례발의권을 주민 또는 도민이 직접 조례 등의 발의가 가능하도록 개정

구 분	현 황				필요한 법 개정
	필요한 청구권자수 (유권자)	효력 발생	조례	기타	
주민소환	10/100~20/100	투표자 1/3 이상 미달하면 미개표	없음 (법에서 위임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청구권자 수와 효력 발생 투표인수 요건의 완화가 필요함 ○ 서명지 주소지별 구분 폐지 ○ 주민소환 조례 제정이 가능하게 개정
주민투표	1/20~1/5	투표자 1/3 이상 미달하면 미개표	경남도 조례 있음 (청구권자총수의 1/20)		
조례발의	1/100 이상	단체장이 도의회에 상정하여 도의회에서 과반수 의결	경남도 조례 있음 (청구권자 총수의 1/100)	단체장 통한 간접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발의 청구인수 완화 ○ 도민 직접발의 가능하도록 법 개정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주민소환, 주민투표, 조례발의 모두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주민소환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만 가능하므로 법률 개정 필요함

기대효과

- 단체장들이 주민의 뜻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됨
- 도정에 대한 주민 참여 및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
- 갈등이 높거나 다수 도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여 사회 통합력을 높일 수 있음
- 자유롭고 편리한 참여방식 개선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

과제목표

- 급변하는 정치, 사회, 환경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기회 마련 등 지방자치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
-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운영방식을 넘어서 도민이 직접 도정에 참여·운영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으로 갈등적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적 신뢰관계 형성
- 도민이 행정의 참여 또는 감시자로서 역할 수행으로 위상과 역할 강화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공모사업 등을 통해 경남도와 시군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자치권 확립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 **도민 참여 활성화 협치** 도정배심원제와 도정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한 활성화
- **읍면동장 공모제 시범사업** 경남도 308개 읍면동 가운데 한, 두 개 정도의 지역에서 동(읍면)장을 일반 공모하여 혁신하는 행정을 시범적으로 시행. 혁신 사례 확산
- **감사위원회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전환
- **도민 감사참여 활성화** 청렴옴부즈만, 명예도민감사관, 민간암행어사 등 시민 참여형으로 활성화
- **국민소송제** 도입 검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면 적극 실시 추진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 성, 연령별 참여구성의 형평성 마련 및 참여 홍보
- 도정자문위원회와 도정배심원제를 개정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협치 모델 발굴
- 읍면동장 공모제는 동장 공모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혁신 사례 발굴, 확산이 목표임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계	1,400	-	350	350	350	350	
주민참여예산제	1,400	-	350	350	350	350	

기대효과

- 도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다양한 형태로 도정에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상호 신뢰와 자발성 형성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
-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공모사업, 도민협치위원회의 신설 및 읍면동장 공모제 등 기존에 경남에서 소극적이었거나 없었던 혁신적 제도 등을 실천함으로써 도민에게 신선한 참여 의욕 고취와 지역사회 신뢰 형성으로 사회적 자본 성장 기여
- 행정감시 및 통제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시스템 마련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도민 신뢰 확보

과제목표

- 도민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시 그 서비스 내용과 결정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어야 서비스 질과 만족감이 높아지며, 이런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의 실현 및 경남 민주주의 수준 제고 가능

주요내용

- 뉴미디어 도민 참여 확대 도정 소통 및 공감대 확산
 - SNS 채널을 활용, 정책 관련 의견 접수 및 실시간 피드백 실시
 -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민관심 콘텐츠 발굴 및 도민 참여 캠페인 추진
- 도민과 함께 서부청사 행복화원으로 서부청사를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쉼터, 토론장, 야외 결혼식 등 가능한 정원으로 리모델링
-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 기존에 있던 품질검수단을 활성화시키며 조례 등 재정비를 통해 활동 강화
 - ※ 검수는 구조체 완료 시, 준공직전 각1회(민원 감소), 30세대 이상 공동주택(30% 정도 증가) 시행, 검수위원 : 90명
 - 품질검수 결과분석 및 우수업체 표창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현재 경남도청 홈페이지를 양방향 소통, 도민 청원 등이 쉬운 개편이 필요함
 - 서부청사가 있는 진주시 그리고 지역 주민과 협의하는 구조가 필요함
 - 공동주택 품질검수대상 확대, 검수횟수 증가로 전담기구(담당) 확충 필요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계	14.1	0.8	2.3	7	2	2	
SNS 콘텐츠 강화	6.8	0.8	1.5	1.5	1.5	1.5	
서부청사 리모델링	5.3	-	0.3	5	-	-	
품질검수단 확대	2	-	0.5	0.5	0.5	0.5	

기대효과

-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민 소통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 실현
- 주택 관련 구조 안전을 확보, 분쟁 민원 감소
- 서부청사 활용으로 주민과 상호 이해 및 신뢰, 주인의식 증대

전략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과제 40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주요현안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과제목표

- 중요 정책 사안이나 갈등 발생 가능 정책 등을 미리 조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의회와 상호 소통을 통해 원활한 협력 유지
- 도의원들의 정책 생산력 향상을 위한 정책 보좌기능 강화

주요내용

- 집행부·의회 정기적 소통 채널 신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간 반기별(또는 분기별,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전)로 1회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력을 높임
- 중요 사안 사전 협의 중요사안 및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와 의회가 사전협의제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 또는 줄임
- 도의회 상임위 정책 지원 도의회 의원들의 정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 보좌의 성격이 아닌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정책 보좌기능 강화 검토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정기적 소통 채널 : 정당별, 위원회별 등 참여 범위, 내용 및 시기에 대한 조율 필요
 - 사전 협의 : 사전협의 대상 사안의 특정 및 협의 대상자 방식 논의해야 함
 - 도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관 지원이 아닌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진행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 소통전담기구 및 사전협의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 소통전담기구 운영비 및 교류비 관련 예산 확보
 - 타 자치단체의 움직임에 대한 파악과 연대, 교류

기대효과

- 경상남도과 경상남도의회와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존중, 적극적 협조와 건강한 견제로 협치와 민주주의의 성숙 및 지역 경쟁력 강화 기여
-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해소함으로써 건강하고 발전적인 도정 운영에 기여함
- 도의회의 입법 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와 경남도민들을 위한 정책의 질 향상

과제목표

- 도청과 교육청 간에 교육행정의 효과적인 논의와 집행을 위해 협치 복원 및 강화
- 사안별로 경상남도, 도의회, 교육청 등의 사전 논의 채널 구축
- 지방노동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도내 기관 간 통합행정체계 구축

주요내용

- **교육행정 협치를 위한 협의기구로서의 기능 실질화**
 -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조례」는 교육청의 조례이므로 경상남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함. 개정('18. 하반기)
 - 단체장 개인의 판단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을 제한할 필요 있으며 협의회 위원으로 경상남도 의회 추천 민간위원 참여, 회의 결과 공개 제안
 - 교육행정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시 교육청, 경남도 담당 공무원 이외 민간인(또는 학부모) 참여 제안
- **교육정책협의 TF 구성** 교육에 대한 경남도의 행정적 지원 이외 도교육청 교육전문직이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테스크포스팀 구성
- **중앙정부 소속기관과 협력** 지방노동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도내에 있는 중앙정부 소속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쟁점사항(장애요인), 조치사항

- 경남도청,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 등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조례' 개정 필요
- 교육청과 경남도의 협의로 경남도의회 교육전문위원을 파견하며 경남도, 교육청, 도의회 3개의 기관이 교육정책에 관해 긴밀한 소통 필요

기대효과

- 친환경무상급식, 무상교육, 온종일 돌봄 등 초중고생들의 보편적 복지를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행정적 지원과 중장기적 해법 모색 가능
- 노동문제, 환경문제 등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 향상

과제목표

- 다수의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 경남의 시군과 타 시도의 시군구와 협력·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협력 행정 구축

주요내용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공동협력기구 구성, 광역푸드플랜, 광역교통망 구축, 광역 재해 재난협의(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추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협력
- **서울시** 경남페이, 친환경급식 자재, 사회적 경제, 귀농귀촌, 공공혁신, 친환경 에너지 등의 교류 협력
- **전라남도** 영호남 교류와 정책 개발, 남해안 관광과 고속철도, 남해안광역경제, UN 기후 변화협약총회 공동유치, 동서상생발전협의회 추진
- **창원시** 스마트창원, 스마트산단, 재료연구원 승격, 물류산업 협력, 한국민주주의 기념관 유치
-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협력 지원** 지리산 중복 투자 최소화과 통합·협력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1998) 설립, 동 협의회에서 '08년 지리산권관광개발 조합 창립하여 활동 중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단일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 가능한 방법 모색
 - 도의회 승인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 검토
 - 도덕적·정치적 선언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과의 구분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 경남도 담당 부서 구분 및 업무 배정
 - 타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와 관례, 일처리 방식에 대한 사전 점검
 - 의회 승인이나 조례·법 등의 개정 추진

기대효과

- 단일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 중복적 투자 및 업무 축소 가능
- 도내 시군들이 타 시군과 협력·협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전략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

과제 43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주요현안
행정과, 회계과, 예산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과제목표

-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공개로 도민의 정보 접근성 및 알권리 보장
- 공공기관의 자원·시설을 도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주민만족도 및 삶의 질 개선

주요내용

- 공공정보 공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요소인 빅데이터 활용, 공공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 변화 기여
- 공공자원, 시설 공유와 개방 문화, 복지 시설, 회의실, 강당 등 도내 공공시설 가용 자원에 대해 보안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개방을 원칙적으로 추진
- 도민이 알기 쉬운 재정 공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내용으로 예산, 결산 공개
- 도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 공개 도민 안전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재난·보건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의 공개 추진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국가안보, 개인정보, 업체 영업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구체화 필요
 - 공공자원, 시설 공유 확대를 위해 개방 대상, 기간 등에 대한 협의 검토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홈페이지 공개
 - 자원·시설 공유 예약 등을 위해 정부 시스템 구축일정과 연계, 조례 정비 등 추진

기대효과

- 공공데이터 개방,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투명한 행정 구현
- 공공자원, 시설의 확대 개방과 공유로 유휴 자원의 활용 및 도민의 편의성 제고

과제목표

- 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복지 사업 발굴 및 만족도 향상

주요내용

- 빅데이터를 이용 민원·복지 분석 및 활용 도민 민원 해결, 우선적 복지 사업 파악, 빅데이터 중요성 교육
- 민자도로 신용카드 결제 추진 경남도 소관인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 도로 통행시 하이패스와 현금 외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민생규제 혁신과제와 지역맞춤형 과제 발굴 기존 네거티브 규제 적극 발굴 및 해결, 도민 참여 민생규제혁신 공모 실시
- 서부청사 민원 해결 현재 본청 방문시 처리 민원을 서부청사도 처리 가능토록 추진

쟁점 및 자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빅데이터 활용 마인드 문화 조성
 - 민자도로 운영 사업체와 협의 선결과 시스템 구축 기간 및 자원 필요
 - 주요조치 및 자원계획
 - 복지, 안전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민 맞춤형서비스 정책 개발
 - 도민 대상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무원 소양 교육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소요예산 : 민자도로 당 2~3억원 정도(시스템 구축 비용)
- ※ 카드 수수료 : 통행요금의 1.4% 정도(가맹점수수료 + 데이터취급수수료)

기대효과

- 민자도로 이용시 불편함 해소 및 교통 생활에 편리함 제고
- 빅데이터 이용으로 복지와 민원에서 도민들 만족도 향상
- 네거티브 규제 해결로 민원 해결 및 민생경제에 활력소 가능
- 서부경남 도민들이 서부청사 민원처리로 만족도 제고

과제목표

- 공무원이 행정 혁신의 주체가 되고 조직 간 벽이 없는 업무 수행으로 새로운 경남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 동력 확보
- 공무원 개인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조직, 개인 모두 win-win하는 조직문화 조성
- 공무원들의 참여, 소통 강화 통한 업무의 통합적 이해와 협력, 협동하는 문화 조성

주요내용

- 제도·규정의 수정 및 폐기 사람과 조직에 대한 올바른 관점 정립과 관점 실행을 방해하는 제도와 규정 제거
- 승진개념 변경 신분 중심에서 일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여 계급 개념 폐지, 보상이 아닌 선발로서 승진 개념 결정
- 성과 관리 프로세스 정착 개인 각자 수행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유도
- 현장 중심 인사관리 체계 구축 현장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운영
- BSC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조직, 개인 보상 차등화를 위한 현재의 평가체계를 조직 성과 지표 개발·측정, 조직성과 창출 논의의 촉진제로 전환

쟁점 및 재원계획

- 조직 내 위계질서 파괴에 대한 우려
- 관리자들의 올바른 리더십 역량 보유, 평가등급 없는 급여와 승진을 결정하는 제도 운영, 중앙정부 인사지침과 다른 방향의 타협 가능성 등에 대한 의구심
- 인사 철학과 원칙의 정립과 공유, 제안제도 활성화, 인사제도 전반 점검과 개선방향 도출
- 혁신 목적과 방향 내부 공감대 형성, 중앙정부와 충분한 사전 조율, 단위 조직 관리자 등의 인사관리 능력 향상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구분	'18년8월	'18년8월~10월	'18년11월	'18년12월~ '19년2월	'19년 1월 ~	비고
인사혁신	인사 방침 정립	인사제도 진단, 개선 방향 도출	내부 의견 수렴, 규정 등 개정	내부 공유	진행	예산 미수반
벽 없는 업무	내부 의견 수렴	벤치마킹, 중앙정부 의견 조율	규정 등 개정	내부 교육	진행	

기대효과

- 리더십을 갖춘 관리자의 확보와 생산성(행정 능률) 제고
- 근무 성적 평정과 BSC 운영 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
- 승진에 대한 불만 해소와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

과제목표

- 도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이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함

주요내용

- **유연근무제 내실화** 유연근무제가 정착을 위해 자율성 강화 및 성과와는 별개 운영 필요
- **공무원 고충 상담 대응** 인사문제, 성차별, 성희롱, 위법한 업무지시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 상담을 위해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사후적인 인사상담을 넘어 고충심사와 고충상담으로 확대
 - 인사위원 중 전문상담관이나 인사고충상담관의 역할을 맡겨 사고 사전 예방 필요
- **양성평등 강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및 위원회 여성 비율 점진적 확대 필요

쟁점 및 재원계획

- **쟁점사항(장애요인)**
 - 유연근무제는 상급자의 실적을 위해서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확산하는 문화 형성
 - 공무원 고충 상담을 위해 인사위원회의 역할 확대, 기관장·부서장들의 확고한 의지 중요
 - 양성평등 역시 의도적인 의지 및 제도의 보완 필요
- **주요조치 및 재원계획**
 - 인사위원회 범위 확대의 실질적 조치 추진
 - 전문상담관 확충이나 인사고충상담관 확보
 - 면접 상담과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필요
 - 고충심사는 위법·부당인사에 대한 사후 구제수단, 고충상담은 비공개적, 일상적 고충에 대한 사전 예방수단으로 병행·발전 추진

기대효과

- 공무원의 근무환경, 문화의 개선으로 업무, 행정 능력 증대 및 스트레스 감소
- 도민들의 민원 만족도 증가

제3부

6대 중점과제

경제혁신 자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공약 1~5, 15, 75, 110, 111
국가산단추진단, 예산담당관
미래융복합산업과, 연구개발지원과, 도시계획과

현황 및 실태

- 지역경기 조선산업 위기 등이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 소비심리 위축 ·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GRDP 성장률은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 중('10~'16년 전국 평균 3.5%, 경남 1.7%)
- 제조업 성장률 '16년도 경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3.8%를 기록, 5년 연속 감소 추세, 최근 7년간 평균 성장률 역시 0.1%로 전국 평균성장률 3.4%를 크게 하회

〈제조업 성장률 변화추이〉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제조업 성장률(%)	전국	18.97	12.55	0.61	-1.04	-0.44	-4.04	-0.93	3.4
	경남	7.1	6.67	-1.96	-4.16	-1.6	-0.78	-3.78	0.1

출처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시도/산업분류별 생산액), 광업제조업동향조사(제조업생산지수)

● 주요산업 현황

구 분	세계시장 규모 〈2016년〉	국내시장 규모 (세계시장 대비 비중) 〈2016년〉	경남시장 규모 (국내시장 대비 비중) 〈2016년〉
항공우주 (국내 1위)	5,719억불	5조 9,383억원(0.9%)	4조 3,971억원(74.0%)
조선해양플랜트 (세계 1~2위)	850억불	142조 8천억원(45.6%)	61조 8천억원(43.3%)
지능형기계	32,390억불	100조 9,460억원(3.0%)	24조 1,383억원(23.9%)
자동차부품	27,957억불	97조 1,792억원(3.3%)	13조 6,015억원(14.0%)

추진방향

-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자원 마련 및 전담조직 구성
- 기존 산단의 구조고도화, ICT융합, 스마트화로 성장동력 확보
- 경남 주력산업(기계, 항공, 조선해양, 로봇, 바이오 등) 혁신성장 지원
- 남북교류 확대 및 신 실크로드 개척에 대비, 미래먹거리 산업 창출
- 구조고도화 및 4차산업혁명 대비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추진계획

주요내용

재원확보 및 전담조직 설치

- 혁신성장관련 국비보조 신규사업 발굴, 예산 1조원 확보
- 도지사 직속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운영
 -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 및 모니터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신경제지 도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컨트롤타워
-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 행정조직(경제부지사) 신설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ICT융합 및 스마트화 지원

- 기존 산단의 스마트 산단화 지원 스마트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운영(G-MBP), 지능형 기반시설 구축(에너지 자립, 통합오염감시시스템 등)
-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항공산업 및 조선해양산업 ICT융합 및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
 - 항공ICT융합클러스터 조성(항공국가산단조성 사업비와 별도)
 -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항공, 조선해양)
- 스마트공장 확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
 - 정부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 양적 확대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견기업간 공동 구축, 동종업종 공동맞춤형 구축, 컨트롤타워 구성

구조고도화 및 4차산업혁명 대비 전문인력 양성

-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플랫폼(G-MBP) 관련 전문인력 양성
- 대학 연계 실무인력 양성, 폴리텍대학, 마이스터고 활용, 교육청과 연계
- 초·중·고 SW교육 지원 확대

쟁점사항(장애요인)

- 경제혁신 국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신규 사업 발굴
- 스마트공장 산단 보급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경남도의 산업, 고용 현황 분석과 정확한 진단을 통한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등 전담 인력 지원 필요

기대효과

- 산업혁신·민생경제를 위한 전담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 경남 주력산업 구조고도화와 혁신성장을 통해 45,498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가율 연

평균 증가율 3% 달성(2018-22년)

* 산업연관표(2015년)상 제조업 취업유발계수 12.9명(10억원 당)

- 제조업 비교우위를 통해, 남북교류 및 신실크로드 시대에 대비한 경남의 미래먹거리 창출
- 제조업 생산 현장의 ICT융합, 스마트화, 스마트 실증단지 4개 이상 확보, 스마트 공장 2,000개 확대로 스마트화 확산효과 기대

추진체계



연차별 조치사항 및 자원계획

-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출범 및 경제전담 조직체계 구축(경제부지사)
 -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출범(2018년 7월)
 - 경제부지사 조직 경상남도 의회 조례 승인 후 시행
 - 매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자원 2,500억 원 확보
- 산단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
 - 창원국가산단·김해대동산단 시범사업 추진(2018-2020)
 - 항공산업 ICT융합클러스터 및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2019-2022)
 - 조선산업 스마트선박실증단지(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2019-2022)
 -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 및 공동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
- 인재양성 스마트공장 및 제조혁신플랫폼(G-MBP) 전문인력 양성, ICT창의 융합 기술교육센터 운영, 대학연계 실무인력 양성 지원, 초·중고 SW 교육 지원
- 혁신성장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12,488	31	586	1,179	1,927	8,765	
스마트 공장	2,075	15	515	515	515	515	
스마트 산단조성	10,213	16	21	614	1,362	8,200	
인재양성	200	-	50	50	50	50	

■ 사회적가치의 의미와 지향

● 사회적 가치란?

-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패러다임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커지고 저성장, 고용의 위기가 증대되면서 국민의 행복은 경제 성장과 비례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체의 원리, 공익, 사회통합’ 등을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에 담아 성장 중심 경제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불평등, 고용위기, 환경파괴 등 극복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
- 이는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로 UN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정해 빈곤, 질병, 노동, 난민, 환경오염, 물 등 17개의 주목표를 해결하고자 함

● 사회적 가치 개념의 지향

- 사회적 가치 개념은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 세 가지가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
-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제성장 중심 속에서 간과된 사회의 질은 사회복지와 개인의 잠재력을 강화하는 조건 아래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확대로 정의
- 아울러 사회적 가치에서 지향하는 지속 가능성은 경제적 성장만 아니라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적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이루어야 함. 그러므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정부혁신

-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정착하여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정부혁신을 통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 정부혁신은 효과성과 효율성 외에 민주성과 형평성을 더하여 공공가치를 지향하며 행정 내부관리 혁신,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혁신,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거버넌스 혁신 등으로 이루어짐
- 경남도는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을 중심으로 경남의 현실과 실정에 맞는 혁신을 주도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 의료와 학교급식 등에서 공공성이 무너짐
 -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인 정책 중의 하나이며 아래로부터 제안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던 친환경무상급식이 중단됨
 - 노인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진주의료원이 다수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자라는 경제적인 논리와 노동조합을 핑계로 폐쇄됨
 - 이는 경남에서 학교급식이라는 교육행정과 보건의로 분야에서 공공성이 무너트리고 상업화 또는 시장에 넘겨주는 상징적인 사건임
- 도민들의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이 훼손됨
 - 도지사의 일방적이고 불통적인 행정에 대해 도민들이 책임을 묻고자 주민소환이라는 직접민주주의를 시도했으나 일부 세력의 방해와 주민소환제의 법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함
 - 한편 경남도교육청의 선출직 대표인 교육감에 대해 맞불 주민소환을 하면서 불법 서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도청의 산하 조직인 FC경남, 경남개발공사의 핵심 인물로 밝혀짐
 - 협치의 중간지원조직인 시민사회단체들도 과거에는 경남도의 도정에 다양하게 참여했으나 직전 도지사 때에는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배제되고 도와 관련된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었으며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사라짐
- 감사, 인사에 전횡으로 공직사회 내의 신뢰 하락
 - 감사가 투명성, 공정성을 잃고 그 결과를 인사 전횡에 사용함으로 인해 공직 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신뢰가 무너짐
 - 도지사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리한 승진으로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승진이나 보람이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됨

■ 추진방향

- ‘공동체의 원리, 공익,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네 주체인 경남도민, 경남도의회, 경남도지사, 경남도청 공무원 등이 원팀으로 팀워크를 이루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회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혁신과 함께 행정혁신은 중요한 동력임. 그러므로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공무원의 자율적 혁신 그리고 혁신을 기획하고 꾸준히 진행하는 추진 주체 형성이 필요함

경상남도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원팀



추진계획

주요내용

도민 청원 제도(도민참여센터 포함)

- 목표
 - 특정 사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도민이 조사에 대한 청원을 하면 도지사는 그에 대해 답변(해결 또는 불가능 등에 대해)을 하고 필요하면 민원 해결
- 주요내용
 - 도민참여센터를 상설화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도민의 청원 내용 접수 : 도민 2,000명 이상 종이 서명한 청원, 온라인에서는 5천 명 이상 동의한 청원(청와대는 20만 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과 결과를 알리는 제도
- 쟁점사항과 장애요인
 - 온라인 시스템 구축
 - 기존의 주민 청원과 다른 부분 이해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사회적 대타협 실현

- 목표
 -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는 협의회 회원 재구성을 통한 경제주체 간 협치 실현
- 주요 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참여 : 현재 인원을 30명 이상으로 늘리고 도의원, 지방정부,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도민 등 참여 폭 확대
 - 협의회 내의 분과실무위원회 구성 : 지역, 산별, 업종 등 다양한 배려가 필요함

- 쟁점사항과 장애요인

- 노사민정협의회 조례개정과 사무국 사무실을 중립적인 곳으로 이동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중립 의무 강화

- 기대효과

- 경제주체들 간 소통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의 공동개발과 적용

- 목표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측정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행정
에 스며들 수 있게 함

- 주요내용

- 도청 차원의 사회적 가치 반영 전략지도 설계와 산출물을 반영한 지표 개발
- 도청 차원의 전략지도와 지표를 참고하여 하부 단위 조직(국, 본부, 과) 수준에서도 개발
- 측정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워크숍 진행(전략지도와 지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완, 측정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
- 도청 산하기관과 출자, 출연기관, 시군에도 이와 같은 프로세스 확대 적용 검토
- 민간 보조사업 평가 지표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평가 항목에 포함

- 쟁점사항과 장애요인

- 지표가 안정될 때까지 해당 지표 측정결과를 기존 조직평가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유예함
- 기존의 평가 기준, 가치와 다른 경우 논의 필요
- 사회적 가치 지표를 만드는 방식은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래로부터 논의와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임

쟁점사항(장애요인)

- 제도, 조례, 위원회, 조직 등의 변경 필요 점검
- 추진 시기, 방법, 진행 정도를 점검해야 함
- 인적, 물적 자원이 어떻게 동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
- 피드백을 다시 반영하는 방법 점검(하나의 제도가 변화, 발전을 위해)

- 특히, 도민과의 관계와 반응 점검(만족도, 의견 등)

■ 추진 절차

- 도민 청원 제도 신설(도민참여센터 포함) : 홈페이지 개편, 도민참여센터의 설립과 함께 진행
-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사회적대타협 실현 : 기존의 노사민정 관련 조례의 개정과 공공기관 관련 조례와 정관 등의 개정 필요
- 사회적 가치를 평가 기준에 포함 : 도청의 업무와 산하 기관, 시군 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 포함

■ 현황 및 실태

- 서울(수도권)-거제(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제조업 성장과 관광수요를 연계함으로써 서부경남의 경제권을 구축, 확대(전남동부권 및 남북교류 확대)할 필요
- 혁신도시 시존 2 계획을 통해 항공우주 및 첨단소재부품산업을 특화분야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서부경남의 제조업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최근 침체된 경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규모 SOC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

※ 전국 지역낙후도 조사(168개)에서 서부경남 시군 대부분 100위 이하

■ 추진방향

- 남북철도 연결 시 일본-한국-중국·러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중심 축으로서 한반도 종단 핵심 인프라 사전 구축
-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자적격성 조사로 경제성이 확보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 구사
- 혁신도시 시존2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서부경남의 제조업 신성장 동력 확보 및 혁신도시를 성장 거점화

■ 추진계획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사업개요

- ▶ 노선 : 김천~진주~거제(191.1Km) ▶ 기간 : 2016~2025년
- ▶ 사업비 : 5조 3,246억원

-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공약 반영('17. 7월)

-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2트랙), 도민 중심의 자율적 추진단체 구성
 - 1안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10호 (지역균형발전)
(쟁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시 타지역 역차별, 특혜 논란
 - 2안 : 현재 민자적격성조사 경제성 확보 → 국가 재정사업 전환
(쟁점) 주말수요 반영 여부
 - ※ 수도권 ↔ 대전 ~ 통영 통행량 4,500만건('16년) 분석, 주말수요 확인
- ⇒ 기본계획수립('19), 기본설계('20), 실시설계('21), 착공('22)



혁신도시 시즌2 완성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 혁신도시 시즌2 및 성장거점화 지원
 -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18.7월),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18.9월)
 - 항공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중심의 (비)R&D 사업시행('18.10월 ~ '24.12월)
 - 혁신도시 컨트롤타워 기능의 복합혁신센터 건립('19.2월 ~ '22.6월)
 - 초전신도심 개발(실시)계획('21.12월),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시행('22~'26년)
 -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18~'27, 2,490억원), 투자선도지구(고성 무인기종합타운, 710억원)
 - 경남도 지역개발계획('18~'27년), 총 74개소, 21,992억원

희유금속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경제영토의 확장

- **전남동부권** 경남-전남 광역경제협력을 통한 희유금속소재부품클러스터 조성
 - 희유금속 관련 기업, 연구소, 상용화센터 유치, 밸류 체인 기반 조성
 - 서부경남 혁신도시 세라믹 소재 관련 첨단소재 개발 공동 연구
- **남북교류 협력** 함경도 등 북한지역 자원 활용
 - 희유금속 관련 공동 조사 및 연구·활용 등 남북경제협력 계획 수립
 - 희유금속 관련 공동사업 및 협력사업 개발 지원

쟁점사항(장애요인)

- KTX 조기 착공을 위한 경제성 대외 설득상의 난관 존재
- KTX 조기 착공 후에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서부경제권의 지역개발 및 교통·관광 인프라 구축 시간 필요
- 중앙 및 경남도의 산재된 혁신도시시즌2 관련 사업의 기능통합을 위한 조직 개편 검토
- 희유금속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내 희소금속 매장량 부족, 소재 전량 수입의존, 소재 기업 부재

기대효과

- KTX 조기 착공으로 수도권과 남부 지역을 잇는 산업·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낙후지역의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 혁신도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서부경남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서부경남 경제권 형성 및 활성화
- 경제영토의 확장(전남 동부권)과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경남의 경제영토 확대
- 혁신도시 시즌 2 완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 항공산업 신성장산업 발전으로 7조 5천억원 생산유발 효과, 1조 8,4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445명 취업유발 효과 달성 기대
 -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비율 증대(2018년 11%→2022년 30%)
 - 혁신도시 내 사업체 증가(2018년 40개→2022년 150개)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관 사업체 증가(2016년 1,742개→2022년 1,900개)

■ 연차별 조치사항 및 자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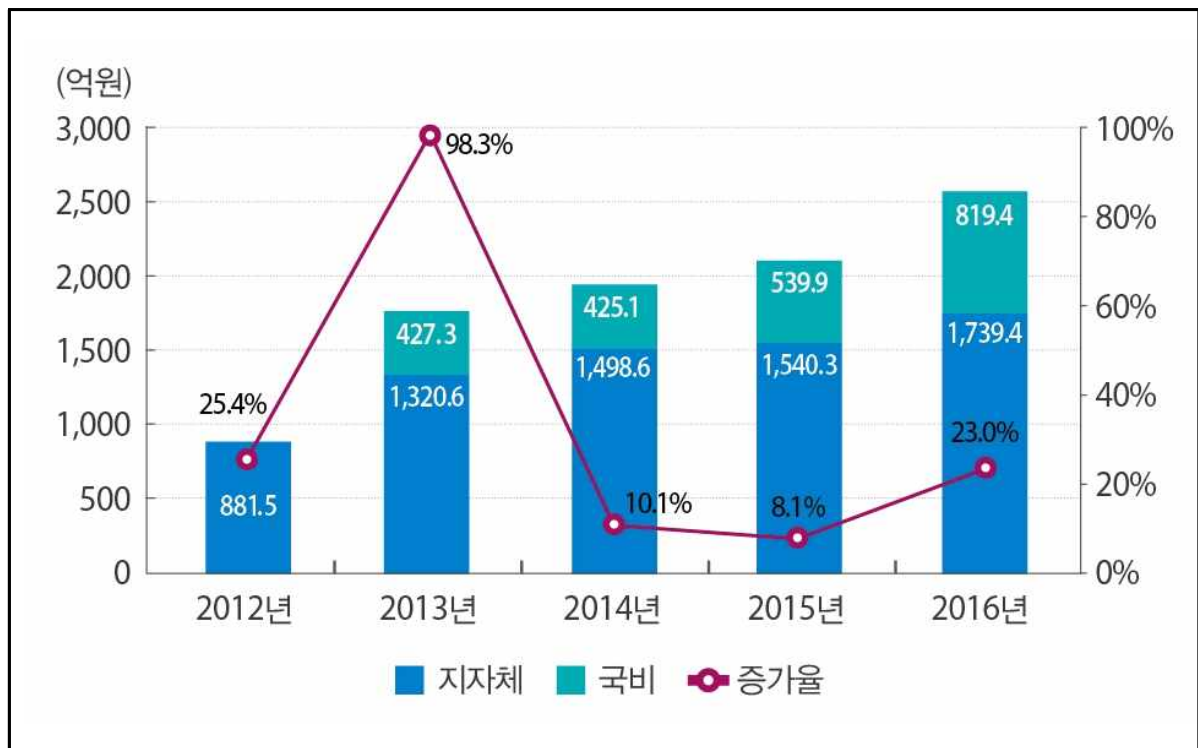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84,024	7,283	6,789	15,514	12,697	41,741	
서부경남 KTX	53,246	-	1,000	10,000	10,000	32,246	
국가혁신클러스터	402	18	64	64	64	192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235	-	45	70	70	50	
희유금속클러스터조성	3,000	3	-	30	30	2,937	
초전신도심 개발	4,006	2	15	23	534	3,432	
도서종합개발사업	2,490	197	239	366	247	1,441	
지역개발계획	20,645	7,063	5,426	4,961	1,752	1,443	

현황 및 실태

- 정부 '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비는 총 19조 44억원
정부에서 경상남도에 투입된 연구개발사업비는 9,721억원(순수 국비)
 - 방위청(3,757억), 산업부(2,756억), 미래부(1,201억), 교육부(888억) 등
 - 국비 R&D 투자순위(4위) : 대전(56,115억), 서울(35,925억), 경기(23,740억) 등
- 경남 '16년 지방비 R&D투자 규모는 2,558억원(국비매칭 포함)
 - 미래산업국(1,032억), 환경산림국(437억),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665억) 등
 - 투자분야 : 기관지원(1,465억), 기업지원(66억), 기술개발(228억), 기반조성(251억) 등

〈연도별 지방비 R&D 투자규모〉



※ 2017년 중앙정부 지원 경상남도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경남TP/2018.01.)

■ 추진방향

- 경남 주력산업 관련 국책연구기관 승격 및 이전 유치 등 공공연구개발 역량 강화
- R&D특구 조성 및 산학연 R&D 공동협력체계 강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 주력산업의 ICT융복합 연구역량 강화
- 지역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소재·부품산업 연구역량 강화
- 사업화 목적기반 R&D확대 및 중소기업 연구·사업화 통합지원 확대

■ 추진계획

주요내용

■ 지역 R&D 체계 혁신으로 지역주도 연구개발 추진

- R&D 사업 발굴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지역 R&D 체계 혁신
- “경남형 R&D 체계”를 지역주도 R&D 체계 혁신 선도모델화

■ 연구기관 유치 및 연구역량 강화

- 재료연구소를 “재료연구원”으로 승격
- KIST 등 국내주요 연구기관(분원) 및 경남주력산업 국책연구기관 이전 노력
- 권역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 대기업 R&D센터 유치 및 기업-연구소-대학 공동연구 확대
- ICT융복합, 소재부품 연구역량 강화

■ 사업화 목적기반 R&D 확대

- 사업화 및 상용화 등 목적기반형의 R&D 중심 운영
- 중소기업 R&D사업화 통합지원 강화
 - 경남TP 내 과학기술진흥센터와 기업지원종합상담센터의 통합(중소기업 R&D사업화지원센터)
- R&D-사업화/상용화 성과평가 및 향후 R&D지원 반영

쟁점사항(장애요인)

- R&D특구 조성
 - 강소연구개발특구 핵심기관 요건충족 및 배후부지 선정(3km이내)
 - KIST 등 국내 주요연구기관 및 대기업 R&D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설립
 - 기존조직 활용 시 자립화 방안 필요, 별도 법인설립 시 장기간 소요
- 소재부품연구단지 조성
 - 스마트시티 부품 산업육성 공약과 연계 추진

기대효과

- 특구 지역내 산학연의 공동R&D 활성화로 '22년까지 연구소기업 30개 육성
- 산학연관 융합협력의 구심점 역할 및 R&D사업화 역량결집
- 지역 ICT산업 및 지역강소 SW기업 20개 육성
- 스마트부품 핵심 및 전략 연구과제 30개, 국제공동연구과제 14개 추진 및 해외연구소 2개 이상 유치를 통한 기술수준 90%이상 달성
 - * 상대수준(%) 및 기술격차(년) : 미국 100(0), 일본 95.5(0.4), 유럽 91.7(0.7), **한국 77.4(1.7)**, 중국 75(1.9)
 - * 스마트 기반기술 수준(미 100) : 센서 75.3, CPS 74.5, IoT 81.5, 빅데이터 76.7
- '22년 까지 중소기업 R&D 사업화 200건 성공 달성
- 연구개발성과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조업 혁신

추진체계(절차)

- 중앙집중, 중앙통제의 R&D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R&D를 발굴·수행할 수 있는 “경남형 R&D 체계” 구축
- 중앙정부에 대한 협력 및 요청 필요시 전략적 접근
 - 강소연구개발특구, 소재부품연구단지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획과 함께 중앙정부 주무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
 - 도·창원시·재료연구소 협력체계 구축(재료연구원 승격)
-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 구성하여 체계적 검토 추진
 - 정보사업진흥본부 확대개편 또는 법인설립 검토(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 중소기업 R&D사업화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

■ 연차별 조치사항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4,643	3	260	1,018	993	2,369	
R&D특구 조성	83	3	20	20	20	20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1,000	-	230	280	280	210	
소재부품연구단지 조성	3,510	-	-	708	683	2,119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	50	-	10	10	10	20	

현황 및 실태

- 개별적 학교급식 운영에 따른 최저가격입찰 등으로 가격 경쟁에 따른 저가 농산물 공급이 우선되어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보장하지 못함
- 경남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마땅한 소비처가 없으며 일반 농산물 역시 대도시 시장중심의 판매경로를 나타내고 있어 농산물 시세변동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과 수도권 중심의 판매경쟁
- 학교 및 공공급식의 지역내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생산보장과 질 높은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먹거리 공급체계의 혁신이 필요함
- 먹거리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지역내 농산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이 필요하나 현재 소수의 시군만 운영 (총 2개소)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시군 : 김해시('14), 거창군('11)
- 경남지역의 농산물 생산과 부울경 도시지역의 수요와 부합하며, 로컬푸드의 활성화와 먹거리 순환 공동체 구축에 적합한 조건
 - 경남 농가의 전국 대비 비율 : 12.1%
 - 부·울·경 인구의 전국 대비 비율 : 15.5%
- 서울시에서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통합하여 지원을 확대하면서 원활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길 희망하여 '친환경 급식자재 공공조달 플랫폼'을 경남도와 함께 구축하려는 계획임

추진방향

- 지역별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로 공공급식의 체계적 지원 및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 및 식품별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시군과 연계체계 구축
- 광역친환경급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울경 공공조달 플랫폼'과 '경남-서울 공공조달 플랫폼'을 형성
- 공공(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現 현금지원방식을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지원을 확대

- ‘경남푸드플랜’을 수립하여 급식을 포함한 도민의 먹거리에 관련된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특성이 반영된 ‘지역푸드플랜’을 건인, 계획 수립과 운영에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 부울경 광역단체장 「동남권(부울경) 상생 협약문」 내용(광역교통청 신설, 광역혁신경제권 구성, 신공항건설 공동TF구성)에 '경남-부산-울산 간 공공급식조달 플랫폼' 내용 추가

추진계획

주요내용

친환경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 ‘공공형(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전 시군으로 확대(현재 김해, 거창 2개소)
 - 시설확충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비로 '20년부터 3~4개소씩 연차별 건립
※ '19년 도시군비 사업으로 1~2개소 건립
 - 운영방안 : 시·군 직영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시 농협 등에 위탁운영
 - 공급방식 : 급식비를 현금지원에서 ⇒ 현물지원 방식으로 점차적 전환
 - 영역확장 : 친환경급식자재 공공조달플랫폼 공급기지 역할 담당
-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 주요기능 : 시·군에서 취급이 어렵거나,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공급, 품목별 광역 조달 및 물류체계 운영
 - 지역별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협의체 운영
 -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1개소를 설치하고 필요시, 서부북부권역 추가 운영
- ‘경남-서울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 및 참여(서울시 친환경급식과와 협의)
 - 경남도와 서울시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통합하는 ‘친환경 급식자재 공공조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군학교급식지원 센터가 친환경 급식 기준을 충족하는 식자재를 공급·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
 - 2019년 : 학교급식지원센터 2개소(김해, 거창), 친환경유통사업단 1개소
 - 영역확장 : 공공급식 지원센터 확충 시 플랫폼에 추가하여 참여

■ 경남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구축

- ‘경남-부산-울산 간 공공급식조달 플랫폼’ 구축(안) 마련
 - 인접권역인 부산울산과 경남에 적합한 시·도간 푸드플랜 성격의 공공조달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도간 먹거리 공급체계 형성
 -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급식자재 공급기지로 삼고 경남지역의 품목별 생산자 단체와 연계한 식자재 조달체계 구축

■ 쟁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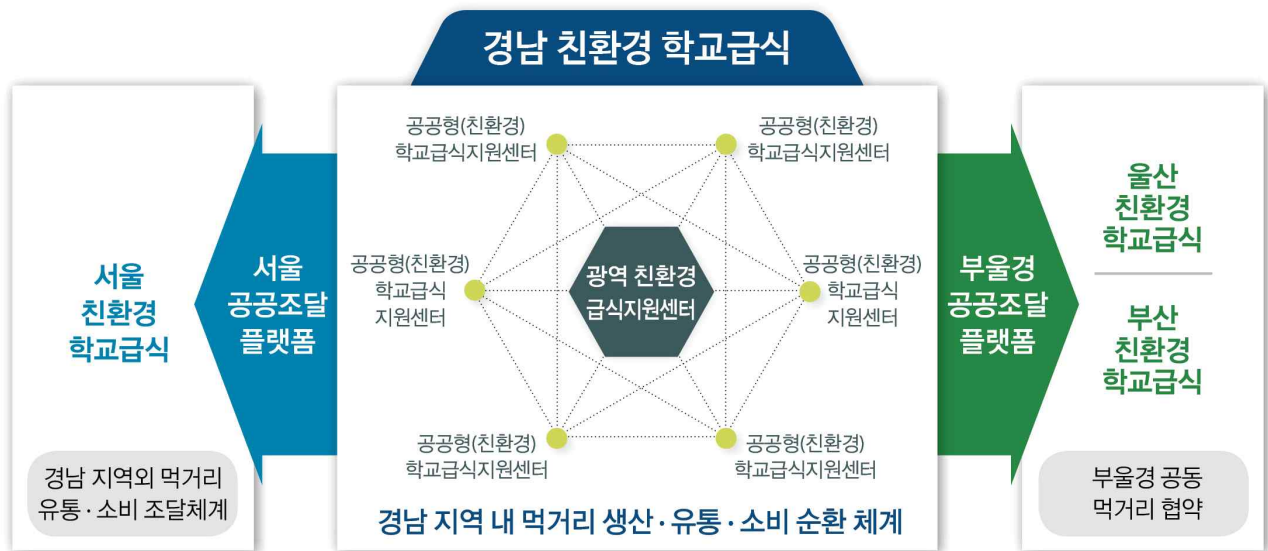
- 전 시·군에 ‘공공형(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한 시·군은 광역센터 및 인근 급식센터에서 조달, 학교수 및 배송여건에 따라 시군간 통합운영 등 검토
- 푸드플랜의 수립을 위한 관련 부서(도·교육청, 도청내 각 부서) 및 시민단체 간 추진 필요성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 및 추진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분담, 범 부서간 컨트롤 타워 필요
- 공공적인 급식 운영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식품안전성 및 품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지원사업(급식센터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생산자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저온유통 물류 설비 지원 등)이 필요하며 품질 관리기준, 급식운영 매뉴얼 등의 운영 가이드 라인 제시 필요
- 공공급식 및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 지원 및 제도상의 개선사항(학교급식 관련 법제도, 교육청 소관 정책 등)파악 및 개선을 위한 협력활동 필요
- 지역푸드플랜 전문가 육성 및 행정조직의 필요성 대두
- 법령 개정 및 조례 제정 필요

■ 기대효과

- 먹거리 공급체계 혁신을 통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안전급식의 확대로 도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기여
- 경남지역 농가의 공공급식 사업참여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득증대
- 먹거리 순환체계 확대에 따른 도내 관련 일자리 확대에 기여
- 먹거리를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는 다양한 경제적 협력을 통한 경남 및 부산, 울산지역 도시와 경남 농촌지역의 협력과 연대 강화
-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공급과 소비의 균형, 도민의 먹거리와 농업,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 및 관심증대로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사회기여

추진체계

친환경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공공형(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 시군직영 또는 위탁운영
-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 : 도 직영 또는 위탁운영
- ‘경남-서울 공공조달 플랫폼’ :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와 지속 협의
- ‘부울경 공공조달 플랫폼’
 - 부울경 협의체(공동협력기구) 창립(9월)시 먹거리부분 협약 추가

경남 지역푸드플랜 구축

-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부산, 울산 공공급식담당(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조체계

- 교육청,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농협(도본부, 시군지부), 민간위원 등과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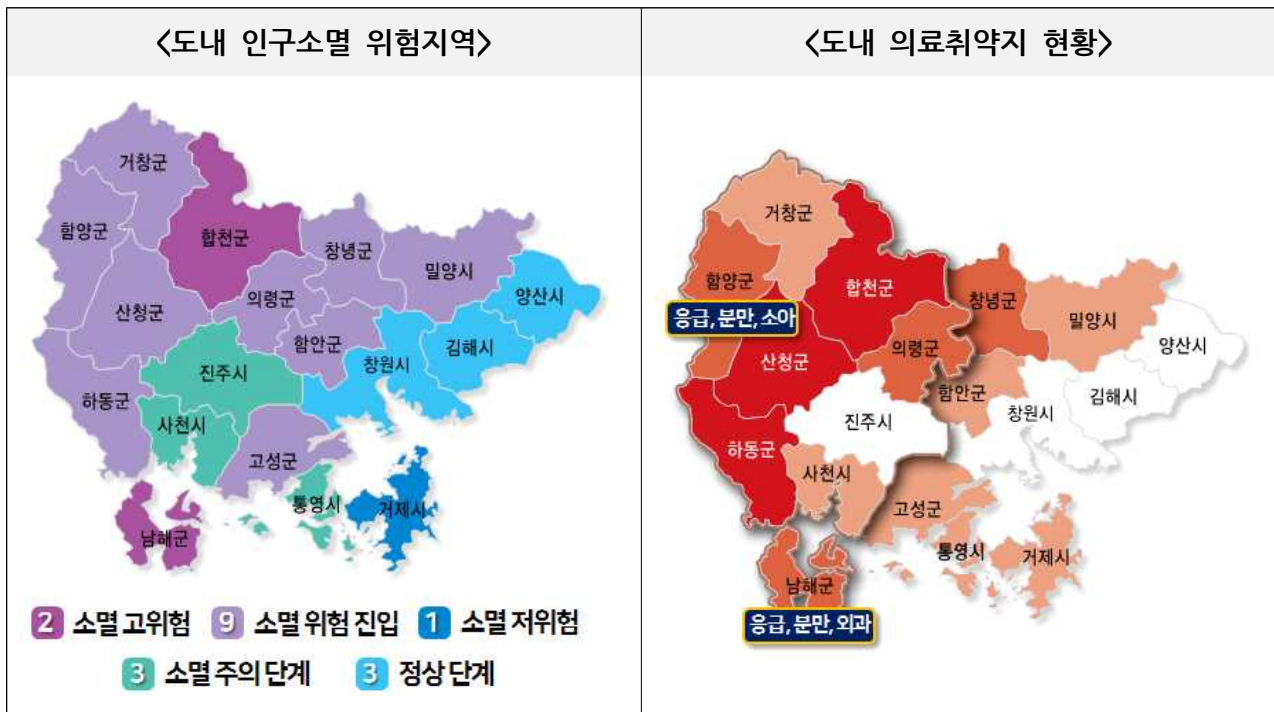
연차별 조치사항 및 자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320	-	40	60	60	160	
공공형(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사업량)	320 (16개소)	-	40 (2개소)	60 (3개소)	60 (3개소)	160 (8개소)	

현황 및 실태

- 주거·교육비·경력단절·장시간 근로·독박육아 등으로 인한 결혼·출산 기피 현상 심화
- 저출생 현상 장기화로 도내 11개 시·군 30년 내 소멸 위험
- 도내 각종 의료취약지(응급, 분만,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가 높게 분포
-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가장 높음(전국 11.1%, 도평균 14.7%, 질병관리본부)
- 경상남도의 기대수명은 80.9세로 전남(80.7세), 울산(80.8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2016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64.4명으로 전국 337.2명에 비해 높은 수준임



추진방향

-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대응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읍면동 사무소부터 국립대병원까지의 통합의료벨트 구축
- 지속가능한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추진계획

주요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권역별 3개소(밀양, 사천·하동, 거창) 설치 및 운영비·취약계층 이용료 감면(70%)비용 지원
- 1개소(밀양) 설치·운영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권역별 확대 설치

■ 공공보건의로 인프라 확충

- 읍면동 방문건강관리 기능 강화,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응급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 시설,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중증외상 관리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공공 인프라 확충

■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3개 권역별(동부·중부·서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하고 권역 내에서 자체완결적인 필수의료서비스(응급/외상, 심뇌혈관질환, 재활, 모자의료, 감염, 치매, 중환자 진료 등) 제공체계 구축
 - (2019년) '경남 공공의료체계 종합진단' 연구용역 실시
 - (2020년) 권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기관(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민간의료기관, 읍면동 방문건강관리인력 등을 활용한 통합의료벨트 구축

〈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안) 〉

- 동부권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민간 공공보건의로 협력병원 ↔ 읍면동 방문건강관리인력, 지역공공보건기관
- 중부권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 마산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민간 공공보건의로 협력병원 ↔ 읍면동 방문건강관리인력, 지역공공보건기관
- 서부권 : 진주경상대학교병원 ↔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거창적십자병원, 민간 공공보건의로 협력병원 ↔ 읍면동 방문건강관리인력, 지역공공보건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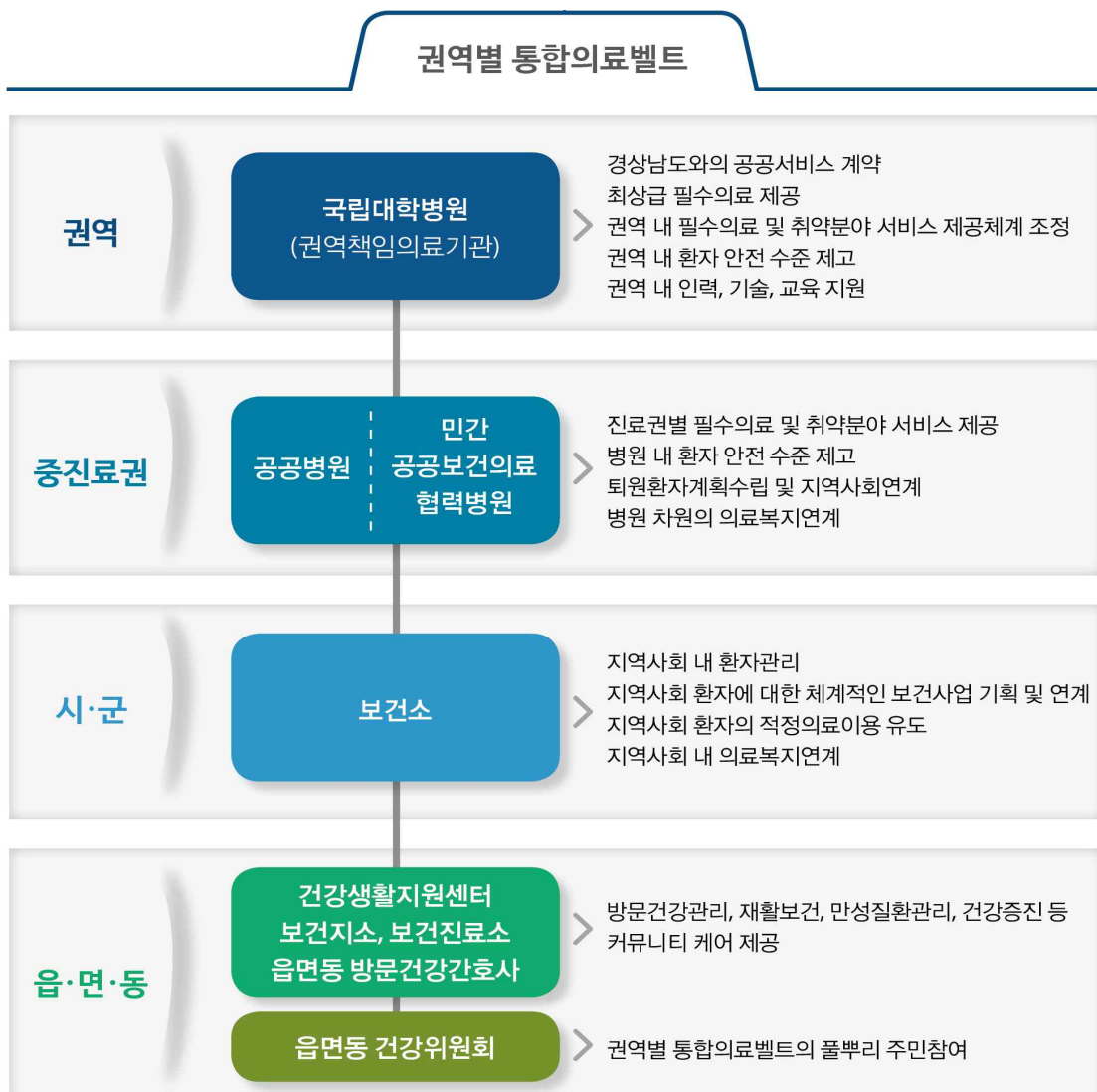
쟁점사항

-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경남 의사회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지속적 협의 필요
- 민간 산후조리원의 반발, 이용대상 감소에 따른 적자보전과 이용료 감면에 따른 예산 부담

기대효과

- 민간 산후조리원 부재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산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경상남도 보건문제를 권역별로 해결할 수 있는 자체충족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경상남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 도민들의 권역 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건강증진

추진체계



■ 연차별 조치사항 및 재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계	2,852.6	176.6	541.9	567.1	727.3	839.7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86	-	20	4	24	38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1,000	-	200	200	300	300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및 운영	354.5	32.5	44.5	92.5	92.5	92.5	
방문건강관리전담공무원채용	412.1	33.3	43.6	59.8	77	198.4	
치매안심센터 확대운영	902	102	200	200	200	200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44	8.8	8.8	8.8	8.8	8.8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54	-	25	2	25	2	

제4부

도정 4개년 계획의
과제추진 및 점검방안

제4부 **도정 4개년 계획의 과제추진 및 점검방안**

1 사업 추진체계와 역할분담

1. 계획 내용의 공유 및 확산

- 도정 4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에 담긴 비전, 도정방침 그리고 도정의 목표, 전략 및 과제에 대해 도청의 공직자, 유관기관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여 도정활동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내재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도지사가 도정 4개년 계획을 도정운영의 핵심적인 지침으로 삼는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천명
 - 도청의 실국장회의,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4개년 계획에 담겨진 과제가 도정활동 수행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을 강조
 - 정기적인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도정 4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임
- 일반 도민들도 향후 4년간의 도정운영의 방침과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과제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의 제안, 기타 추가적인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도정 4개년 계획을 도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서 4개년 계획이 향후 4년 동안 도지사 활동의 핵심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을 강조
 - 4개년 계획의 과제를 추진하는데 도민들이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적절히 포상하는 방안의 강구

2. 과제추진 체계의 구축과 실행

- 4개년 계획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과제의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작동하여 과제의 목표가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기로 함
- 과제 추진 전담부서와 협조부서의 지정
 - 과제의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전담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과제의 이행이 이들

부서의 책임과 협조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함

- 계획서에 제시한 대부분의 과제는 과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주 사업들의 실행으로 과제의 목표가 실현되는 것임. 그러나 과제에 포함 된 주요 사업들의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과제의 전담부서는 과제의 포함된 사업들을 식별하여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법, 추진시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전담부서가 검토하여 작성한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계획은 소관 총괄책임기관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가칭)도정 4개년 계획 과제추진 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된 후 구체적인 추진을 실시함

● 분야별 과제 총괄책임기관의 설정과 운영

- 과제 전담부서간의 조정과 협력 그리고 전담부서와 협력부서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도하고 과제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애로 및 장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총괄책임부서의 설정이 필요함
- 본 도정 4개년 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야별 총괄책임부서를 두기로 함

※ 경제혁신과제: 경제혁신추진단(경제혁신위원회)

도민의 참여, 도민과의 소통혁신관련 과제: 사회혁신추진단

행정내부의 혁신관련 과제: 행정혁신추진단

기타 과제: 기획조정실

● 「(가칭)도정 4개년 계획 과제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도정 4개년 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점검을 위하여 도지사 직속으로 「(가칭)도정 4개년 계획 과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급 공무원 7명과 민간인 7명으로 구성하고 행정부지사와 민간인 가운데 호선한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음
- 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한 과제추진 모니터링 구축방안

- 앞에서 제시한 「(가칭)도정 4개년 계획 과제추진 위원회」는 과제추진을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지만,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원회로는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와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를 들 수 있음
-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는 그 주요 기능이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의결하는 것임
-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는 그 주요 기능이 ‘도정의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 주요 도정의 추진 방향,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하는 것으로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함

3. 과제추진 점검체계의 구축과 실행

- 도정이 전반적으로 과제중심적인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제도의 구축과 추진이 필요함. 과제이행 책임부서를 중심으로 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과제이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점검과 환류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 과제 전담부서의 자체점검과 모니터링
 -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과제 전담부서에 의한 자체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활동이 중요함. 과제 전담부서는 과제 수행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 경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과제의 기대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과제 전담부서는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함께 과제 추진상의 당면 문제점과 대응책, 과제관련 이해관계집단들의 반응 및 동향, 다음 분기에 추진할 활동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이를 과제 총괄책임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 분야별 과제 총괄책임기관의 점검과 모니터링
 - 분야별 과제 총괄기관은 소관 과제 전담부서가 분기별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사전 서면검토를 한 후, 전담부서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관 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분야별 과제 총괄기관은 분기별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각 과제별 사후활동에 대한 조정과 조언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연 2회(6월과 12월), 소관 과제들에 대한 추진 실적과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가칭)도정 4개년 계획 과제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추진경과(진행상황)에 대한 파악과 보고는 다음과 같은 양식에 따름(예시)

전략	과제명	주요사업	추진상황				
			준비 단계	착수 단계	실행 단계	완료 단계	미 진행
전략1 (전략명)	과제1(과제명)	사업1(사업명)					
		사업2					
		사업3					
	과제2	사업1					
		사업2					
전략2	과제1(과제명)	사업1(사업명)					

- 「(가칭)도정 4개년 계획 과제추진위원회」의 점검과 모니터링
 - 위원회는 과제추진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관해 최종적인 심의기능을 수행하면서 과제

추진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관한 정기적인 점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

- 위원회는 분야별 총괄책임기관이 보고한 추진경과(진행상황)를 종합하여 전 과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과제별 보완조치를 마련함
- 위원회는 전 과제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경제혁신분과, 도민복지분과, 행정혁신분과를 두고 이들 분과에서 소관 과제의 추진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체위원회에 보고함
- 위원회는 연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과제 전담부서와 총괄책임부서의 장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과정에 필요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짐. 위원회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함
- 중점과제의 경우는 중점과제 점검 특별분과를 구성하여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체위원회에 보고함. 위원회는 특별분과의 보고를 토대로 도지사의 참석하에 중점과제 전담부서, 관련 총괄책임부서의 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중점과제의 추진상황과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향후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과제의 추진성과와 성과평가와의 연계

- 도정 4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연말에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제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아울러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 추진성과의 평가항목은 과제별 추진노력, 성과지표 달성도, 도민만족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아울러 과제의 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도 반영할 필요

4. 과제별 전담부서 및 협력부서 운영

목표	전략	도정과제	전담부서	협력부서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전략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국가산단추진단	예산담당관 일자리창출과
	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사업 확충	국가산단추진단	미래융복합산업과 연구개발지원과 도시계획과
	3	R&D 체계 혁신과 광역연구플랫폼 구축	연구개발지원과	미래융복합산업과
	4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항만정책과	교통물류과
	5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서부대개발과	
	6	서부경남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미래융복합산업과	국가산단추진단 서부정책과 한방향노화산업과
	전략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창출			
	7	청년일자리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재정점검과
	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창출과	여성가족정책관 경제정책과 서민복지노인정책과
	9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서민복지노인정책과	보건행정과
	전략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경제정책과	
	11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	경제정책과	
	12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13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과	
	전략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농산물유통과	
	15	농산물 수급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친환경농업과	
	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
	17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협치 농정 실현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18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	어업진흥과	해양수산과
사람 중심 경남 복지	전략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19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지원담당관	
	20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	교육지원담당관	건축과 일자리창출과
	21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여성가족정책관	
	22	지역 공공의료보건의료서비스 증진	보건행정과	장애인복지과

목표	전략	도정과제	전담부서	협력부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전략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23	노동자 권익 보호	기업지원과	재정점검과 일자리창출과 서민복지노인정책과
	24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여성가족정책관	
	2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복지과	
	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서민복지노인정책과	보건행정과
	전략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27	최적의 대기질 관리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28	낙동강 수질개선	수질관리과	수자원정책과
	29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연구개발지원과	기후대기과
	전략4.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			
	30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문화예술과	가야시연구복원추진단
	31	생활 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확충	체육지원과	
	32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	관광진흥과	서부대개발과
	전략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33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도시계획과	연구개발지원과 경제정책과
	34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	문화예술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교통물류과 장애인복지과
	35	수요자 중심 광역교통체계 확충	교통물류과	신공항건설지원단
	36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안전정책과	교육지원담당관 경제정책과 재난대응과 예방안전과 방호구조과
함께 여는 혁신 도정	전략1. 참여 민주주의 확대로 만드는 사회혁신			
	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행정과	
	38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	행정과	정책기획관 감사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39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	공보관	건축과 서부정책과
	전략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40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41	통합행정체계 구축	교육지원담당관	행정과
	42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정책기획관	행정과
	전략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			
	43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행정과	회계과 예산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44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재정점검과 대민봉사과
	45	적소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인사과	
	46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행정과	인사과

중점과제명		전담부서	협력부서
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국가산단추진단	예산담당관 미래융복합산업과 연구개발지원과 도시계획과
2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행정과	
3	서부경남 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서부대개발과	미래융복합산업과 서부정책과
4	R&D 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연구개발지원과	미래융복합산업과
5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농산물유통과	
6	저출생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여성가족정책관 보건행정과	장애인복지과

2 투자계획

1. 총괄

목표	전 략	사업비 (’18년~ '21년)	연도별 투자계획(억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합 계		122,787.69	22,322.01	28,417.42	37,244.52	34,803.74	260,210.33
다시 뛰는 경남 경제	계	42,347.09	7,822.31	13,054.12	10,330.43	11,140.23	131,919.45
	전략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31,156	6,260.5	10,006.5	7,216.5	7,672.5	127,983.5
	전략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	6,707.59	1,147.31	1,519.92	1,867.73	2,172.63	2,381.45
	전략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3,317.2	391.8	1,375	762.5	787.9	787.6
	전략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1,166.3	22.7	152.7	483.7	507.2	766.9
사람 중심 경남 복지	계	37,553.50	7,236.90	8,331.0	11,207.09	10,778.51	89,376.88
	전략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6,364.65	757.75	1,681.1	1,730.3	2,195.5	2,427.9
	전략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1,765.3	218.5	389	561.4	596.4	644.2
	전략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14,687	3,207	3,076	4,741	3,663	65,820
	전략4.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	10,189.5	2,491.75	2,245.8	2,757.05	2,694.9	17,638.1
	전략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4,547.05	561.9	939.1	1,417.34	1,628.71	2,846.68
함께 여는 혁신 도정	계	1,062.1	0.8	352.3	357	352	352
	전략1. 참여 민주주의 확대로 만드는 사회혁신	1,062.1	0.8	352.3	357	352	352
	전략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	-	-	-	-	-
	전략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	-	-	-	-	-	-
중점 과제		41,825	7,262	6,680	15,350	12,533	38,562

2. 목표별 투자계획

다시 뛰는 경남 경제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18년~ '21년)	연도별 투자계획(억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합 계			42,347.09	7,822.31	13,054.12	10,330.43	11,140.23	131,919.45	
전략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1	경제혁신 자원 1조 조성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	-	-	-	-	-	
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사업 확충	계	24,461	5,997	9,048	4,893	4,523	10,931	
		스마트 공장·산단 및 인재양성	3,723	31	586	1,179	1,927	8,765	
		핵심산업 고도화	20,738	5,966	8,462	3,714	2,596	2,166	
3	R&D 체계 혁신과 광역연구플랫폼 구축	계	2,274	3	260	1,018	993	2,369	
		R&D 특구 조성	63	3	20	20	20	20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원	790	-	230	280	280	210	
		소재부품연구단지조성	1,391	-	-	708	683	2,119	
		중소기업 R&D사업화 센터	30	-	10	10	10	20	
4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계	1,069	13	32	22	1,002	105,002	
		동북아 물류산업 전진기지	1,066	10	32	22	1,002	105,002	
		동북아 물류 R&D센터 및 융복합 스마트 물류단지	3	3	장기전략 용역을 통해 사업비 산정				
		항만서비스 자유구역	-	선박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 조성 후 해양수산부 건의					
5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	-	-	-	-	-	
6	서부경남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계	3,352	248	667	1,284	1,155	9,682	
		국가혁신클러스터	463	38	125	150	150	258	
		항공·ICT 클러스터	1,063	3	-	530	530	4,240	
		희유금속 클러스터	63	3	-	30	30	2,937	
		항노화산업 육성	1,763	203.5	541.5	573.5	444.5	2246.5	
전략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									
7	청년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계	1,070	179.5	245.5	322.5	322.5	123.5	
		청년일자리 확충	826.5	174	217.5	217.5	217.5	15.5	
		청년 창업 지원	243.5	5.5	28	105	105	108	
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계	4,841.3	801	1,092.1	1,325.1	1,623.1	2,023.1	
		경력단절여성 분야	8.7	-	0.9	3.9	3.9	3.9	
		인생이모작지원센터	41	-	26	7	8	9	
		일자리더하기장려금	21	-	7.2	7.2	7.2	7.2	
		노인일자리(총사업비)	4,770	801	1,058	1,307	1,604	2,003	
9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계	796.29	166.81	182.32	220.13	227.03	234.8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85.29	96.37	108.43	138.73	141.76	145.21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11.13	23.32	24.38	29.78	33.65	38.02	
		산모·산생아간병관리지원사업	187.43	44.06	46.45	48.46	48.46	48.46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12.44	3.06	3.06	3.16	3.16	3.16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18년~ '21년)	연도별 투자계획(억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전략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계	1,153.2	45.1	903.7	122.5	81.9	87.6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810	-	810	-	-	-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확대	154	20	38	48	48	48
		소상공인 비용절감매출증대 지원	15.5	-	6.5	4.5	4.5	4.5
		소상공인 사회안전망확충	59.9	2.5	14.8	18.2	24.4	30.1
		유통구조 선진화 지원	95.	18.2	30	46.8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18.8	4.4	4.4	5	5	5
11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		-	-	-	-	-	-
12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계	1,509	263	369	409	468	529
		중소기업 자금	1,217	226	292	322	377	439
		청년채용기업 환경개선	210	30	60	60	60	60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82	7	17	27	31	30
13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계	655	83.7	102.3	231	238	171
		사회적경제민간가버넌스 지원	8	2	2	2	2	2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92	-	15	138	139	66
		경남사회적경제디딤돌 정책	355	81.7	85.3	91	97	103
전략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계	180	2	46	66	66	178
		지역푸드플랜 수립	160	2	6	6	6	18
		공공급식센터 건립	20	-	40	60	60	160
15	농산물 수급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계	104.5	-	27	27	50.5	50.5
		친환경실천마을장려금	80	-	20	20	40	40
		친환경실천농가장려금	24.5	-	7	7	10.5	10.5
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계	81.2	10.4	23.6	23.6	23.6	13.2
		청년취농인턴제	3.6	-	1.2	1.2	1.2	1.2
		청년취농직불제	36	-	12	12	12	12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5.6	1.4	1.4	1.4	1.4	-
		경영실습임대농장조성	36	9	9	9	9	-
17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협치 농정 실현	계	6.6	0.3	2.1	2.1	2.1	4.2
		위원회 운영비 확보('18년~)	2.1	0.3	0.6	0.6	0.6	1.2
		농어업회의소 설치 지원('18년~)	4.5	-	1.5	1.5	1.5	3.0
18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	계	794	10	54	365	365	521
		패류 양식산업 육성	350	-	10	175	165	350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204	-	24	90	90	96
		수출물류단지조성 (수산식품거점단지)	200	-	10	90	100	-
		어촌6차 산업 확대	40	10	10	10	10	75

■ 사람 중심 경남 복지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18년~ ’21년)	연도별 투자계획(억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합 계			39,854.5	7,698.9	8,847	11,843.09	11,465.51	90,049.88
전략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19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계	2,048	256	584	584	624	624
		친환경무상급식	1,933	256	559	559	559	559
		실질적무상교육확대	100	-	20	20	60	60
		경남형온종일돌봄	15	-	5	5	5	5
20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	계	26.35	0.25	8.7	8.7	8.7	8.7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2.35	0.25	0.7	0.7	0.7	0.7
		청년터 조성	15	-	5	5	5	5
		주거복지 확대	9	-	3	3	3	3
21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계	1,809	262	457	424	666	874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80	-	40	-	40	40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48	-	20	4	24	3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33	66	182	202	383	489
		보육료 차액지원	281	2	93	93	93	181
		공동육아나눔터확충	44	7	10	13	14	14
		긴급육아 · 공공가사도우미	447	111	112	112	112	112
		공기청정기 설치	76	76	-	-	-	-
22	지역 공공의료보건 서비스 증진	계	2,481.3	239.5	631.4	713.6	896.8	921.2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신설	700	-	200	200	300	300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및 운영	262	32.5	44.5	92.5	92.5	92.5
		권역 외상센터 (헬기장 설치비) 지원	10	-	10	-	-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	156	-	16	54	86	-
		방문건강관리전담공무원채용	213.7	33.3	43.6	59.8	77	198.4
		치매안심센터 확대운영	702	102	200	200	200	200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35.2	8.8	8.8	8.8	8.8	8.8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52	-	25	2	25	2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 사업 지속 확대	12	-	4	4	4	4
		찾아가는 진료버스	5.4	0.9	1.5	1.5	1.5	1.5
		경남 365안심병동 확대	333	62	78	91	102	114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18년~ '21년)	연도별 투자계획(억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전략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23	노동자 권익 보호	계	98	2.5	28.5	32	35	38
		이동노동자 쉼터	49	-	14	16	19	22
		감정노동자상담센터	38	-	12	13	13	13
		비정규직근로자센터	11	2.5	2.5	3	3	3
24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계	199.5	39	52.5	53	55	57
		여성가족정책 연구 기능강화	0.5	-	0.5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 산정		
		종사자처우개선	199	39	52	53	55	57
2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계	638	147	157	163	171	179
		인권침해 실태조사	1	-	1	-	-	-
		장애인일자리 확대	637	147	156	163	171	179
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계	829.8	30	151	313.4	335.4	370.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채용	490	-	70	210	210	210
		임플란트·틀니 수술	132	28	34	35	35	71
		관절수술비 지원	14.8	2	4	4.4	4.4	9.2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50	-	15	15	20	20
		어르신센터 설치운영	143	-	28	49	66	60
전략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27	최적의 대기질 관리	계	2,387	564	688	555	580	573
		대기측정망 확충	32	10	12	10	-	4
		주민건강역학조사	18	6	6	6	-	
		미세먼지 저감 협약	485	239	246	-	-	-
		친환경차 보급 확대	1,596	258	366	468	504	494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56	51	58	71	76	75
28	낙동강 수질개선	계	3,784	1,472	1,156	1,156	-	-
		환경기초시설 지속 확충	3,784	1,472	1,156	1,156	-	-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5개 시군 개 하천	석교천(함안), 의령천(의령, '19년~)				
		녹조발생 예방 대책 추진	취정수장 운영 강화(주1~2회), 수질모니터링(본류8, 지류7)					
		점·비점오염원 관리강화	폐수가축분뇨배출업소 수시 점검, 농업인 대상 비점오염 교육홍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매년 이행평가 및 시행계획 변경 등('18년 4단계 기본계획 수립)					
29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계	8,516	1,171	1,232	3,030	3,083	65,247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033	438	482	530	583	5,247
		민간투자 사업	6,483	733	750	2,500	2,500	60,000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18년~ '21년)	연도별 투자계획(억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전략4.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								
30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계	4,985.5	548.35	1,184.6	1,666.05	1,586.5	7,176.5
		문화역량 강화	533.1	196.75	132.1	102.1	102.1	102.1
		경남정신 확립	4,312	330	1,008	1,531	1,443	7,023
		문화기본권 보장	140.5	21.6	44.5	32.95	41.4	51.4
31	생활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확충	계	899	647	55	80	117	126
		창원마산야구장 조기건립	615	615 (민간 40포함)	-	-	-	-
		장애인체육관 건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편의시설 확충	284	32	55	80	117	126
32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	계	4,305	1,296.4	1,006.2	1,011	991.4	10,335.6
		힐링 휴양관광 상품개발 및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	1,684.3	668.5	345	351.8	319	9,656
		관광환경 조성 및 생태관광 자원개발	520	132	134	126	128	130
		열린관광지,스마트 시스템 및 관광두레활성화	105.1	16.6	30.4	28.6	29.5	28.9
		전략적 관광마케팅	1,995.6	479.3	496.8	504.6	514.9	520.7
전략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33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계	3,184	391	596	1,007	1,190	2,366
		도시재생뉴딜 본사업	3,064	361	566	977	1,160	2,336
		도 자체스타트업사업	120	30	30	30	30	30
34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	계	1	1	-	-	-	-
		통합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18~’19)	1	1	용역 결과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및 공공청사 등 시설 개선사업비 산정			
35	수요자 중심 광역교통체계 확충	계	217.95	23.9	67.4	61.64	65.01	106.98
		광역환승 할인 확대	107.35	-	39.90	32.74	34.71	75.18
		100원택시 확대	110.6	23.9	27.5	28.9	30.3	31.8
36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계	1,144.1	146	275.7	348.7	373.7	373.7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185.1	-	61.7	61.7	61.7	61.7
		우리동네안전'지키미(AI)'	3.5	-	1.5	1	1	1
		스마트 재난방재 시스템 강화	921	146	200	275	300	300
		전통시장 노후시설, 전기 등 개선	31	-	11	10	10	10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	3.5	-	1.5	1	1	1

■ 함께 여는 혁신 도정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18년~ '21년)	연도별 투자계획(억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합 계			1,062.1	0.8	352.3	357	352	352
전략1.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만드는 사회혁신								
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	-	-	-	-	-
38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	계	1,050	-	350	350	350	350
		주민참여예산제	1,050	-	350	350	350	350
39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	계	12.1	0.8	2.3	7	2	2
		SNS 콘텐츠 강화	5.3	0.8	1.5	1.5	1.5	1.5
		서부청사 리모델링	5.3	-	0.3	5.0	-	-
		품질검수단 확대	1.5	-	0.5	0.5	0.5	0.5
전략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40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	-	-	-	-	-
41	통합행정체계 구축		-	-	-	-	-	-
42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	-	-	-
전략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								
43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	-	-	-	-	-
44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	-	-	-	-	-
45	적소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	-	-	-	-	-
46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	-	-	-	-	-

3. 중점과제별 투자계획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18년~ '21년)	연도별 투자계획(억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합 계			50,452.9	7,493.6	8,216.9	18,338.1	16,404.3	53,874.7
1	경제혁신 자원 1조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계	3,723	31	586	1,179	1,927	8,765
		스마트 공장	1,560	15	515	515	515	515
		스마트 산업조성	2,013	16	21	614	1,362	8,200
		인재양성	150	-	50	50	50	50
2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	-	-	-	-	-
3	서부경남 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계	42,283	7,283	6,789	15,514	12,697	41,741
		서부경남 KTX	21,000	-	1,000	10,000	10,000	32,246
		국가혁신클러스터	210	18	64	64	64	192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185	-	45	70	70	50
		희유금속클러스터조성	63	3	-	30	30	2,937
		초전신도심 개발	574	2	15	23	534	3,432
		도서종합개발사업	1,049	197	239	366	247	1,441
		지역개발계획	19,202	7,063	5,426	4,961	1,752	1,443
4	R&D 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계	2,274	3	260	1,018	993	2,369
		R&D 특구 조성	63	3	20	20	20	20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원	790	-	230	280	280	210
		소재부품연구단지조성	1,391	-	-	708	683	2,119
		중소기업 R&D사업화 센터	30	-	10	10	10	20
5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계	160	-	40	60	60	160
		공공형(친환경)학교급 식지원센터 건립	160	-	40	60	60	160
6	저출생 총력 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계	2,012.9	176.6	541.9	567.1	727.3	839.7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48	-	20	4	24	38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700	-	200	200	300	300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및 운영	262	32.5	44.5	92.5	92.5	92.5
		방문건강관리전담공무 원채용	213.7	33.3	43.6	59.8	77	198.4
		치매안심센터 확대운영	702	102	200	200	200	200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35.2	8.8	8.8	8.8	8.8	8.8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52	-	25	2	25	2

3 조직수요 및 조례

1. 조직수요

부서(13)

구분	추진방안
경제혁신추진단 (일자리사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신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 주요 정책 심의, 조정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신설 필요 일자리사업본부 추가검토 후 결정
노동전담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인권 보장, 노동자 권익개선 등 다양한 노동정책 추진 과단위 전담부서 신설 필요(노동정책, 노사협력, 노동복지 등)
사회혁신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혁신추진위원회 신설 사회혁신기획관 신설 필요(도민소통, 디지털 혁신, 도민참여센터) 도민참여센터는 오프라인 소통업무 담당(민간전문가 채용)
행정혁신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정혁신과제 발굴·점검, 주민참여 등을 통한 지속적 도정 혁신을 위한 자문기구 신설 기존 분리된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혁신담당관 신설 검토
도시디자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디자인 관련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한 종합적 기획 및 정책수립 부서 필요
저출생보육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지사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설치 필요(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 기존 분리된 기능을 통합하여 과단위 전담부서 신설 검토(인구정책, 출산, 보육,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주민참여예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예산1담당에서 관련업무 수행중임. 조직확대 검토 필요
공공의료체계 확충 전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종합적,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T/F팀 신설 필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조직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도 조직 개편, 수자원 정책기능을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관
지역푸드플랜전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푸드플랜, 경남-서울 공공조달플랫폼,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농산물유통과내 담당 신설 필요
기후대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대기과 조직 확대 필요, 미세먼지 TF(조직 승인 중), 기후변화업무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신기후체제 담당 신설 필요
MICE산업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CE업무 일원화 및 MICE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해 관광진흥과 MICE산업담당 신설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CO 독립경영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임시 전담팀 구성(위탁계약협약, 업무 인수 등)
부울경광역교통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울경 협의를 통해 부울경 광역교통기구 설립 추진 광역교통 추진 담당 필요

■ 위원회·협의체(7)

구분	추진방안
사회적 경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회적 경제 위원회 신설 필요 ◦ 지역공동체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토록 권고
문화예술협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경남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문화예술협치위원회로 확대 재구성 ◦ 자문기능에서 정책제안기능까지 확대
합의제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으로 공정한 감사실현을 위해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 후 신설 필요
도정 4개년계획 과제추진 위원회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정 4개년계획 추진 지원 및 점검을 위해 필요
경남상생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간 갈등해소 등 심의자문 역할의 협의회 신설 필요 ◦ 경남상생조례 제정 후 갑질신고센터도 포함
먹거리시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단계부터 도민 공감 대안을 제시하는 협치기구인 가칭 '바른먹거리위원회', 또는 '희망먹거리위원회' 신설 필요
농어업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농어업인의 농정불신 해소와 농어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등 민관협치 농정을 실현하는 도지사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신설 필요

■ 공기업·출자출연기관(3)

구분	추진방안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확대개편 또는 별도 법인설립 검토 필요
경남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조사용역 후 조례개정, 재단설립 등 준비를 거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관 분리(경남문화재단, 경남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
관광마케팅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조사용역 후 관광마케팅 전담기관 신설 필요 - 창원컨벤션센터, 경남컨벤션뷰로 총괄운영 검토

2. 조례 개·제정

구분	조례명	추진방안
개정 (11)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조례	○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행정협의회 운영 사항 포함
	주민참여예산조례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필요
	경남도정자문위원회	○ 개정 필요
	도민참여센터 조례	○ 도민참여센터를 행정조직에 포함시킬 경우 별도 제정 불필요.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 개정 필요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적 경제 위원회 신설을 위해 개정 필요
	non-GMO 친환경급식지원 조례	○ 공공급식확대 정책 확정, 조직이관 이후 경상남도 학교급식 조례(규칙) 개정
	주민투표조례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청구요건 등 가장 완화하여 조례 개정
	조례 발의 조례	
	경남도정배심원제	○ 개정 필요
	경남문화예술진흥조례	○ 사업조직, 명칭 변경을 위해 개정 필요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관리책임부서 국제통상과에서 관광진흥과 이관
제정 (17)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	○ 조례 제정 필요 ○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도 필요
	경남 농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조례 제정 필요
	경남상생조례	○ 조례 제정 필요 ○ 조례 제정시까지 발생하는 사안은 현재 운영 중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
	도정 4개년계획 과제추진위원회 조례	○ 조례 제정 필요
	경상남도 미세먼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상위법령 제정시 별도의 도 자체 미세먼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 조례 제정 필요
	경상남도 공공가사도우미 지원 조례	○ 조례 제정 필요
	생활임금조례	○ 조례 제정 필요
	건강기본조례	○ 조례 제정 필요
	경남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조례	○ 조례 제정 필요
	경남콘텐츠산업 육성조례	○ 조례 제정 필요
	영상산업 육성조례	○ 조례 제정 필요
	예술인복지 조례	○ 조례 제정 필요
	주민소환조례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에 청구요건 등 필요규정이 모두 포함 ○ 아울러 조례 위임사항이 없고, 조례로 별도 정할 영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 불요 ○ 법률 개정시 조례 위임사항이 신설되면 조례 제정 필요
	국민소송제	○ 법 개정 선행, 조례 제정 필요
	경상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필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필요

부록

공약, 정책협약 및 도민 정책제안 과제

1 정책공약 현황

No	공약(주요내용)	자유한국당 후보 유사공약(37개)
1	경제혁신 특별회계 1조 조성	
2	경제혁신추진단 설치	
3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스마트산단으로 육성	
4	경남형 혁신인재양성 프로그램 도입	
5	핵심 산업의 고도화(항공우주·해양플랜트·나노·바이오·지능형기계산업)	○
6	경남 R&D 특구 조성	○
7	재료연구소 ‘소’ → ‘원’ 승격	○
8	경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원 설립	
9	소재부품연구단지 조성	○
10	동북아물류플랫폼(동북아 물류산업 전진기지, 항만서비스자유구역 지정, 동북아 물류 R&D센터 설치, 융·복합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11	서부경남 KTX(남부내륙고속철도) 임기내 착공	○
12	희유금속 클러스터(희유금속 첨단소재부품단지 조성)	
13	희유금속 클러스터(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에 희유금속 소재부품 기업유치 및 R&D 예산 우선 확보)	
14	희유금속 클러스터(희유금속 산업 생태계 구축, 산·학·연 융합 R&D 추진 등)	
15	항공 ICT 융복합 클러스터(무인항공기 특화단지 조성, 항공 MRO 산업단지)	○
16	혁신도시 시즌 2(진주를 혁신도시 시즌 2 선도도시로 육성)	○
17	도지사 직속 저출생·보육기구 설치	
18	경남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19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20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대	○
21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 지원	○
22	경남형 종일돌봄 체계 구축	
23	긴급 육아도우미 파견	
24	공공가사 도우미 제공	
25	미세먼지 없는 어린이집(공기정화장치 렌탈비 지원비율 상향)	○
26	교육행정협의회 실질화	
27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도입	○
28	실질적 무상교육 확대(수학여행, 교복, 체육복 무상화 비용 일부 지원)	
29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내진보강)	
30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31	경남형 온종일 돌봄	○
32	청년 일자리 창출(공공기관 채용비리 완전 퇴출, 청년의무고용비율 5% 등)	

No	공약(주요내용)	자유한국당 후보 유사공약 여부
33	청년창업 활성화(청년사관학교 추가유치)	
34	청년창업 활성화(경남기반 창업투자회사 설립)	
35	청년창업 활성화(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한 청년창업)	
36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제도 신설)	
37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체불 긴급 지원)	
38	(가칭)경남 청년터 설립	
39	새일센터확충	
40	#With you 경남(성폭력·데이트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41	새로운복지전달체계 찾아가는 복지센터(복지센터 신설, 전담 공무원 추가고용)	
42	방문건강관리서비스	
43	청년주거복지확대(청년 1인가구 더불어주택 확대)	
44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45	공공의료체계 확충(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신설)	
46	공공의료체계 확충(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	○
47	공공의료체계 확충(보건소부터 종합병원까지 통합의료벨트 구축)	○
48	맞춤형 돌봄의료(‘찾아가는 진료버스’ 농어촌 지역 순회 무료진료)	○
49	맞춤형 돌봄의료(경남 365 안심병동 확대)	○
50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
51	일자리더하기 장려금	
52	경남 창업지원학교(정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추진)	
53	노인일자리(노인 공공일자리 5만개 확보, 일자리 수당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	○
54	경남형 치매국가책임제(치매안심센터 확대)	○
55	경남형 치매국가책임제(권역별 치매안심병원 지정)	○
56	임플란트,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
57	100원 택시 확대	○
58	어르신 센터 설치	
59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제정	
60	장애인 실태조사	
61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저상버스 시내버스 표준모델화)	
62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경남 공공시설 중 문턱, 단차, 간격 등 이동약자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 제거)	○
63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민·사업체 인센티브, 유니버설 놀이공간, 신규 관광지 조성시 디자인 적용)	
64	장애인 체육관 건립	
65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66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67	경남페이(서울페이 시스템 경남 적용)	○
68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69	경남 소상공인 사랑상품권	

No	공약(주요내용)	자유한국당 후보 유사공약 여부
70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71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	
72	갑질신고센터 설치	
73	경남상생조례 제정	
74	경남상생협의회 구성	
75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76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센터	
77	경남 중소기업 시설·설비투자 대출 이차차액 보전 확대	
78	경남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 사업도입	
79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도입	○
80	경남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	
81	경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이차보전 사업 확대	
82	경남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83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84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운영	
85	노동전담부서 설치	
86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87	공공급식 확대(친환경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88	공공급식 확대(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경남푸드플랜 수립, non-GMO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 제정)	
89	청년농업인 육성	
90	정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공모	○
91	협치농정실현(농어업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설치, 농민참여예산제)	○
92	6차산업 스마트양식장 조성(스마트양식장 시범 및 실증단 구축, 푸드플랜 수립 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93	6차산업 스마트양식장 조성(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확대와 패류양식산업 육성)	○
94	도시재생 활성화	○
95	1시간 경남(연계수송형 복합환승센터 설치 및 광역급행버스 도입)	○
96	광역교통기구 설립 및 통합요금제 도입	
97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및 남해안 도보여행길	○
98	미세먼지 대책(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예경보 시스템 강화)	○
99	미세먼지 대책(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기질 관리)	
100	미세먼지 대책(친환경차 확대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101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적극 추진	
102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도시 조성(지진·화재 방재 대비 시스템 강화)	
103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사업	
104	협치로 완성되는 문화예술(경남문화예술진흥원 역할별 기관분리, 문화예술협치 위원회 구성)	
105	경남도립예술단 설립	○

No	공약(주요내용)	자유한국당 후보 유사공약 여부
106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	
107	예술인 복지환경 개선(경남예술인그라민금고 설치)	
108	예술인 복지환경 개선(예술인복지환경 조례 제정 및 경남예술인복지센터 건립)	
109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조기 지원	
110	일자리사업본부 설치	
111	산업, 지역별 고용실천 전략수립	
112	경남형 주민참여예산	
113	참여로 이루는 혁신도정(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 완화)	
114	합의제 감사기구	

2 정책협약 현황 및 구현방안

정책협약 현황: 지자체(4개) 및 단체협약(20개)

협약 및 세부과제		협약월일
지자체 협약(4)		
1	경남-서울 정책협약	5.24
2	경남-전남 정책협약	5.21
3	경남-창원 공동약속	6.10
4	동남권(부울경) 상생 협약	6.26
단체협약(20)		
1	경남농민단체협의	5.24
2	경남여성단체연합	6.4
3	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	6.11
4	경남환경운동연합	6.11
5	경상남도사회적경제협의회(3개)	5.23
6	경상남도수산업인	6.2
7	경상남도수의사회	5.16
8	문화예술인 정책협약(국가무형문화재연합회, 경남음악협회, 문창문화연구원)	5.28
9	(사)경남민예총	5.28
10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경남지회	6.8
11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6.7
12	(사)한국해양구조협회 경남지부	6.2
13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	6.10
14	울산경남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을 위한 모임	5.31
15	자치분권경남연대, 경남주민자치회	5.30
16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5.28
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5.25
18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협의회	6.11
19	창원미술청년작가회	5.28
20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6.8

※ 기관명 가나다 순임

정책협약 구현방안

지자체 협약

1 경남-서울 정책협약

① S-PAY(서울페이), K-PAY(경남페이) 도입 협력(과제 10, 42)(경제정책과)

사업내용

- QR코드, 애플리케이션 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상점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벤(VAN)사 없이 결재를 진행하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0%대로 절감
- 서울페이(S-pay)를 도입, 공동개발·운영

추진방안

- 서울시와 협조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역은행과 협약을 통해 수수료 추가 인하 추진
- 중기부에서 추진 중인‘소상공인페이’공동 활용 방안 포함 검토

② 친환경 급식자재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과제 14, 42)(농산물유통과)

사업내용

- 경남과 서울시는‘친환경 급식자재 공공조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급식 기준을 충족하는 식자재를 공급·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방안

- 경남-서울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 및 참여
 - 2019년: 학교급식지원센터 2개소(김해, 거창), 친환경유통사업단 1개소
 - 영역확장: 공공급식 지원센터 확충 시 플랫폼에 추가하여 참여

③ 사회적경제 상호 교류 확대(과제 42)(지역공동체과)

사업내용

- 경남-서울 사회적경제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관계자 사회적 경제 관계자 워크숍 개최 및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개척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지원
 -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양 시도 제품 교환 판매

추진방안

- 경남-서울 사회적경제 관계자 워크숍
 - 사회적경제 종사자 및 공무원 대상, 정책 및 우수사례 교환, 사회적가치의 효율적 실현방안, 인적네트워크 형성 등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시 양 시도 제품 교환 판매

④ 귀농귀촌 도농교류 지원 등 공동사업 실시(과제 42)(농업정책과)

사업내용

- 서울시민 대상 경남 귀농정책 홍보 강화 및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

추진방안

- 양 지자체간 협력강화를 위한 협의체 설치 및 관련기관 교류협력 확대
 - 담당부서장, 담당자 중심 실무형 협의체 구성
 - (서울시 교육청) 농촌자원과 농촌체험마을을 활용한 청소년 교류 적극 추진
- 신규 공동사업 추진
 - 서울시민 대상으로 귀농 귀촌 팸투어, 정책 홍보(박람회, SNS 등) 강화, 귀농 귀촌 연수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과 경남 도내 체험휴양마을 상호교류 및 농촌 MICE 산업 연계

⑤ 공공혁신 선도(과제 42)(행정과)

사업내용

- 사회적가치 반영 및 소통·협치를 통한 혁신 도정실현 위해 경남형 혁신 실행계획 추진

추진방안

- 기 시행중인 사업을 확대·개선 추진
 - 상생 혁신 과제 발굴 및 상호 협력을 통한 공공혁신 선도
 - 우수 혁신시책의 상호 교류 및 공동 추진
 - 시도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정책 우선적 지원
 - 공무원 상호 교류근무 추진으로 혁신 행정기법 습득

⑥ 친환경 에너지 및 환경 협력(과제 42)(연구개발지원과)

사업내용

-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정책 협업 및 미세먼지와 수자원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 정책 공동 수립

추진방안

- 추진방안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홍보 및 확대 방안 교류
 - 설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안 협의
 - 국비 교부절차 및 조건, 설치 표준안 등 개선안 건의
- 미세먼지와 수자원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정책 공동 수립
 - 환경분야(미세먼지, 수질) 관련 공무원 교환(파견) 근무 및 과제 공동연구
 - 양 시도 공동 현안 및 협조사업 공동 추진

2 경남-전남도 정책협약

① 영호남 교류협력 확대, 남해안 해양관광도로·고속철도 조기개통(과제 42)(정책기획관)

사업내용

- 남해안 해양관광도로 조기 개통
 - 국도 77호선 여수~남해 해저터널(7.3km), 고성~통영 해상교량(3.0km)
- 남해안 고속철도 조기 개통
 - 울산 ~ 부산(부전) ~ 진주 ~ 광양 ~ 순천 ~ 보성 ~ 임성(358.8km)
 - 부전~마산 복선전철 '20년 개통, 진주(하동)~광양 전철화 '21년 개통

추진방안

- 남해안 해양관광도로는 동서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전남과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기계획에 사업반영 및 조기 시행 추진
- 현재 공사 중인 우리 道 구간 복선전철화 '21년 완전 개통 추진과 전남구간 전철화 조속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 및 협조

② 여수-광양-하동-진주 남해안광역경제권 구축(과제 6, 42)(미래융복합산업과)

사업내용

- 희유금속산업 육성 기반조성사업
 -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갈사만)에 희유금속 소재부품 기업 유치 및 R&D예산(비R&D 포함) 우선 확보
 - 희유금속 산업 생태계 구축, 핵심기술 개발 역량의 전략적 집중, 산업적 활용 중심 산·학·연 융합 R&D의 추진

추진방안

- 전남 비철금속을 도내 주력산업과 연계방안 협의 : '18.7. ~ '18.12.
- 희유금속산업 육성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추진 : '18.9. ~ '19.8.
 - 타당성 분석, 광역경제권 구축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 추진

③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과제 42)(서부대개발과)

사업내용

- 남해안을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전남, 경남 공동 추진
 - 사업기간 : 2016년 ~ 2026년
 - 대상권역 : (경남)통영, 거제, 남해, 하동. (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추진방안

- 남해안도로 경관 형성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군 조례 반영
-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및 홍보
-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 공동 추진

④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공동유치(과제 42)(기후대기과)

사업내용

-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공동유치
 - 개최주기 : 매년 개최(12월 전후 2주간) ※ COP24 : '18.12.3~12.14(폴란드)
 - 참가규모 : 세계 각국정상, 정부대표 및 NGO 등 20,000여명
 - 당 사 국 : 197개국(196개 국가 및 유럽연합) ※ 우리나라('93.12 가입)
 - 개최지역 :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 1~2년전 총회에서 차기 개최국 결정
※ 2022년(COP28)이 아시아 순번이나 2020년(COP26) 여수유치 추진

추진방안

- 아시아권 개최시기가 2022년(COP28)이나 전남(여수)에서는 2020년(COP26)에 유치계획으로 개최대륙 순번 변경에 대한 국가적 차원 대응 필요
 - 총회 유치의 당위성 및 정부 설득논리 방안을 위한 용역 검토 중(여수시, '18.8~)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컨벤션, 숙박 등 인프라 확충 필요
- 전남도(여수)에서 총회유치 타당성 및 유치계획 수립 시 우리 도 공동대응 방안 검토

⑤ 농업 수산 및 지역발전 정책개발 공동연구(농업정책과 등)

사업내용

- 농축수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농어촌 지역발전 정책·사업을 협력하여 추진
- 수산자원 유지를 위한 기술 연구, 기후변화 대비 전략품종개발 기술교류 협력, 자원 감소 품종 자원회복사업, 어업생산성 향상 실용기술 연구·개발 협력 등

추진방안

- 친환경학교급식 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상호교류,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물 재배 상호 기술교류 및 육성 정책 개발, 경남-전남도 농업인 단체 자매 결연 및 상호 교류 협력 추진
 - 경남도 농업인단체현황: 20개 단체 73,696명
- 기술연구 및 연안자원 회복 사업 공동 추진,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협의체 설치, 해면·내수면 어종 연구협력 확대 등

⑥ 동서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제 42)(정책기획관)

사업개요

- 명 칭 : (가칭) 동서상생발전협의회
- 구 성 : 경남·전남 도지사
- 개최주기 : (정기회) 연 1회 (임시회) 필요 시 수시
- 운 영 : 양 도가 1년 단위 협의회 운영

추진방안

- 협의기구 구성 관련 시도별 실무협의 : '18. 7~8월
 - 기구 성격, 명칭,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 논의
- 공동협력기구 구성 방침 수립(시도 공동안) : '18. 8월
- 공동협력기구 창립회의 : '18. 9월 ~

3 경남-창원 공동약속

① 창원과 활력이 넘치는 스마트창원(과제 42)(항만정책과 등)

사업내용

- 스마트창원 마산해양신도시
 - (단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 공모 추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MP수립 지원사업 공모 추진
 - (장기) 창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수립 : 창원시, 승인 : 국토부)
- 마산항을 스마트항만으로 전환
 - 창원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산항을 스마트항만(마산항 스마트 항만물류 네트워크)으로 전환
 - ※ 마산항의 항만 관리·개발·운영은 해양수산부(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추진방안

- 마산해양신도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창원시), 정부 공모대비 협의체 구성(도, 협조사항), 지역특화 소규모 스마트시티 추진
- 마산항 물류네트워크를 스마트화(교통망, 항만이용 절차 등) 하는 방안을 마산항 관리주체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이용자 등과 협의 추진
 - 스마트항만 필요성 등 파악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컨테이너 하역·적재 무인자동화 구축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② 창원 노후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개선(과제 2, 42)(도시계획과)

사업내용

- 도내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 등 기업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노후산단에 ICT를 결합한 스마트산단으로 조성
-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ICT등 기반기술을 적용한 지능형기계 스마트공장이 구축된 구조고도화 및 산업클러스터 육성

추진방안

- 스마트 산단 자문위원회(경발연·TP 등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구성·운영

- 경남형 스마트 산업단지 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18 하반기)
- 정부 공모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시 스마트 산업클러스트 등 반영

③ 재료연구소, 원으로 승격(과제 3, 42)(연구개발지원과)

사업내용

-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독립기관인 “원” 승격 추진
- 추진 상황
 - 연구원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 및 창립총회 : '16. 8.
 - “한국소재연구원” 설립관련 법률개정 발의(노회찬,박완수의원) : '17. 1.
 - “원”승격 유명민 과기부 장관 건의(진주방문시, 권한대행) : '18. 4.

추진방안

- 과기정통부, 부설연구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안)마련 용역('18.11월완료예정) 중
- 용역 진행사항 파악하여 경남도-창원시 협력, “재료연구원” 승격 지원 방안 마련

④ 부산진해신항 물류산업 활성화 지원(과제 4, 42)(항만정책과)

사업내용

- 부산진해신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이 창원의 미래와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지원
- 신항을 동북아 물류산업 전진기지로 구축

추진방안

- 대형항만(Mega-Port) 구축(10조) 및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1조) 등이 경남에 입지토록 국가 항만계획 반영 추진(해수부, '18.6.착수, '20.12. 고시)
 - 해양수산부 및 창원시와 정책적 협력 강화
- 글로벌 제조물류기업을 위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200만㎡)
- 남북평화·북방물류 등 급변하는 항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항만물류 연구센터 설치 추진

⑤ ‘한국민주주의 기념관’ 창원 유치 노력(과제 42)(행정과)

사업개요

- 장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 친수공간사업 부지내
- 건립규모 : 부지 41,294㎡, 건물 11,680㎡
- 총사업비 : 250억원(공사비 220, 전시시설비 30)
- 주요시설 : 추모광장, 민주광장, 기념관, 야외갤러리, 주차장 등

추진방안

- 민주주의기념관 유치를 위한 민관협업
 - 유치 간담회 개최(道·市·민주화관련 5단체) : '18. 8월
 - 창원유치 범시민유치위원회 재구성(민주화관련 5단체*) : '18. 9월
 - ※ 3·15의거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3·15의거열사 김주열기념사업회, 3·15정신계승시민연대
 - 창원유치 「시민 서명운동」, 「결의대회」추진 : '18. 10월
- 창원유치 당위성 중앙부처 등 적극 설명
 - 대정부 건의문 발송 및 지역 국회의원 유치활동 건의
 - 주무부처(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국회 방문·설명

4 동남권(부울경) 상생 협약

① ‘동남권(부울경)공동협력기구’ 설치(과제 42)(정책기획관)

사업개요

- 명 칭 : (가칭) 동남권상생발전협의회
- 구 성 : 경남·부산·울산 시도지사
- 개최주기 : (정기회) 연 2회 (임시회) 필요 시 수시
- 운 영 : 3개 시도가 1년 단위 협의회 운영

추진방안

- 협의기구 구성 관련 시도별 실무협의 : '18. 7~8월
 - 기구 성격, 명칭,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 논의
- 공동협력기구 구성 방침 수립(시도 공동안) : '18. 8월
- 공동협력기구 창립회의 : '18. 9월 ~

② ‘동남권(부울경)광역교통청’ 신설(과제 35)(교통물류과)

사업내용

- 광역교통행정기구 설치로 광역급행버스, 광역환승제 등 도입 추진

추진방안

- 부울경 상생협력을 위해 부울경 광역교통기구 설립 추진
- 부울경 교통부서 동남권광역교통청 설치 요구를 위한 협의체 구성
 - 동남권 광역교통청 설치 시 우리 도내 유치

③ 동남권(부울경)의 맑은 물 확보(과제 42)(수자원정책과)

사업내용

- 동남권(부울경)의 맑은 물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
 - 낙동강 수질개선, 풍부한 유량 확보, 재해·재난 예방

추진방안

-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적극 추진
- 풍부한 유량 확보(한국수자원공사 협업 추진)
 - 기존 댐 재평가 및 효율적인 용수배분을 통한 여유수량 검토
 - 강변여과수 등 대체 식수원 확보를 위한 지역 의견수렴 등 노력
- 재해·재난 예방(관계기관 협업 추진)
 - 댐·보 방류에 대한 관계기관 연락체계 구축으로 재해 예방
 - 홍수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시설(저류지 등) 지속 설치

④ 시민의 안전한 삶을 함께 추구(과제 42)(재난대응과 등)

사업개요

-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건의(지진)
- 자연재난 피해 복구 공동지원 체계 구축(풍수해)
 -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인력, 물자, 장비 등에 대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
 - 각 지자체별로 구성중인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반을 지진 피해지역에 공동 지원 체계 구축
-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및 대응

추진방안

- 동남권 상생협의회를 통해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연구원 조기 설립 건의
- 동남권 상생협의회를 통해 자연재난 피해 복구 공동 지원 체계 구축
-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등을 위해 실무협의 개최, 3개 시·도 연구기관 간 교환근무, 과제 공동연구, 공동 현안 및 협조사업 공동 추진 등 논의

⑤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동 TF 구성(신공항건설지원단)

사업내용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 공동의 TF를 구성

추진방안

- 부산시 및 울산시와 협의 후 추진

단체 협약

사업내용

- 단체협약은 2018년 5월 16일 ~ 6월 11일 기간 동안 문화, 역사, 생태, 해양, 농업, 수산, 여성, 환경, 노동, 사회적 경제, 자치분권 등 20개 단체와 102개 과제에 대해 협약을 맺었음

추진방안

- 각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유지
- 제안된 102개 과제 중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담당 실국의 실무검토를 거쳐 추진방안 모색

3 도민정책제안 현황 및 사례

도민참여센터 경남1번가 운영

-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한 도민참여센터 오프라인 경남1번가는 6.27(수)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홀에서 온라인 경남1번가는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오픈하였음. 또한, 6.27(목)에는 경남1번가 진주 서부센터 개소식을 진행하였으며 7.4(수) 경남1번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오픈하였음
- 1달간의 활동기간동안 센터·현장에서 682건, 온라인 190건, 우편 8건, 이메일 36건, 전화 16건 등 932건의 도민제안이 있었음

도민제안 우수정책사례

정책내용		제안자
1	자동차 번호판도 휴대폰처럼 계속 사용할 수 없나요?	박희헌님
2	경남 도민의 날을 제정해주세요	우석주님
3	경남 소상공인 상생협의체 활성화	전옥선님
4	발달장애인 치과병원 지정	강호진님
5	폐교를 활용한 치매예방 사업	양남영님
6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및 생태계 조성	이종관님
7	커피숍 일회용품 사용제재 필요	황혜림님
8	청년에 대한 사회상속제(청년의 신체와 정신을 사회가 지켜줌)	이종관님
9	남해대학내 실버산업 및 노인관련 학과 개설	김두일님
10	보편적 주거복지의 대안, 사회주택(공동육아주택, 여성안전주택 등)	김준섭님
11	청소년 시설확대에 대한 제안(청소년진로특화시설 등)	지종근님

새로운 경남위원회 위원 및 지원인력

공동위원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은진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분과	기획분과	이시원(분과장) 경상대학교 교수 명희진 경남도 정무특보 홍재우 인제대학교 교수 김태영 경남발전연구원 사회가족연구실장
		박일동 서기관, 송상훈 비서관, 한미영 사무관, 이진로 주무관, 정서영 주무관
	행정혁신분과	정원각(분과장) 희망진주시민의길 집행위원장 이용석 전 교보생명 인사상무 이자성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
		이도완 서기관, 강승제 사무관
	경제1분과	전수식(분과장) 전 마산시 부시장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훈 경남대학교 교수
		조웅제 서기관, 황영아 사무관
	경제2분과	김훈규(분과장)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유진상 창원대학교 교수 박현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임기 서기관, 권현진 사무관
	사회분과	윤치원(분과장) 경남영상위원회 위원장 박명덕 전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 사무관 정백근 경상대학교 교수 이종엽 전 경남도의원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현규 변호사
		안태명 서기관, 김현미 사무관
도민인수위원회		정보주(위원장) 전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신순정(도민참여센터장) 전 경남문화진흥원 기획실장 정홍자 전 시민참여단 팀장

경제혁신민생위원회 위원 및 지원인력

위원장		김경수 도지사
부위원장		손은일 한국폴리텍Ⅷ대학 학장
분과	경제혁신분과	유남현 경남대학교 교수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박민원 창원대학교 교수 나영우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이사장
		천성봉 부이사관, 조현준 서기관, 문병춘 사무관
	민생혁신분과	차윤재(분과장) 마산 YMCA 사무총장 이인순 문성대학교 교수 심상완 창원대학교 교수 김은점 한국노총 경남본부 총무기획본부장
		김기영 부이사관, 안재규 서기관, 이재철 사무관

※ 활동기간 : '18. 6. 22. ~ 6. 30.

활동내용 : 신경제지도 기본설계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100일 내 시급한 경제과제 선정, 산업위기특별지역 대책 대응, 추경편성안 검토 등을 추진하여 경제분야 도정인수에 기여함. 경제혁신민생위원회 활동으로 도출된 결과물은 새로운경남위원회로 전달되어 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음